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2 AM 페이지 1

국제개발협력

2006년 제3호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ODA 논단

1.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원조 …… 7
유영방 _ 전 아프카니스탄 대사

2.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심으로… 22
권 율 _ KIEP 책임연구원

Ⅱ. KOICA 업데이트

1. 세계 빈곤퇴치와 한국의 역할 : "한국적 제3의 길" 국회 토론회 …… 43
2. KOMIS 구축현황 : …… 54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 제 57차 OECD/DAC(개발원조위원회)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보고 …… 63
-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결과 및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71
- 제1차 한-UNDP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78
- 대 NEPAD 지원추진(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 82
- 2006년 UNCTAD 최빈개도국 보고서 …… 87
- APEC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각료회의 …… 98
- 2006 ECOSOC 실질회의(9) - 인도지원분야 …… 102

2. 공여국
-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1) …… 104
-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2) …… 108
- 제2차 한-영 ODA 정책협의 결과 …… 110
- 영국 정부 개발원조 백서 발간 …… 114
-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회의(CGI) 개최 …… 120
- 2006년 베트남 중간연도 원조공여국회의 개최 결과 보고 …… 125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2 AM 페이지 5

I. ODA 논단

1.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원조

2.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2 AM 페이지 7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원조

유 영 방 / 전 아프가니스탄 대사

1. 원조의 배경 및 과정

가. 미국의 대테러전과 아프간 임시정부 수립

아프가니스탄은 1979년 12월에 시작된 소련의 침공으로 약 10년에 걸쳐 전쟁을 수행했고 1989년 2월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한 후에도 국내 정파간의 투쟁으로 내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전 기간 중 가장 혹독했던 1994년부터 1년 동안 약 2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 카불의 1/3이 파괴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다. 내전 기간 중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탈레반이 1996년 9월 수도 카불을 점령함에 따라 동 기간부터 2001년 11월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테러전으로 탈레반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아프간 국민들은 약 22년에 걸쳐, 전쟁과 폭력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탈레반은 1997년 국호를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으로 바꾸고 이슬람 율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은 의료행위 외의 직업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율법 위반자에 대한 체형이 도입되었다. 이슬람 율법의 왜곡 및 철저한 시행으로 아프간 국민들은 전쟁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로 바뀐 상황 속에 무자비한 인권탄압으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가난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다수가 인접국 등 제 3국에서 난민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탈레반정부에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테러 주범으로 지목된 알카에다 지도자를 인도 요청하였으며 탈레반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동년 11월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을 감행하게 됨에 따라 탈레반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되었다.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 건설과 경제 및 사회 재건을 위한 노력에 착

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일차적인 노력으로서 유엔안보리의 조치를 들 수 있다.

2001년 11월 14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1378)의 주요내용은 첫째, 아프간에서 테러리즘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가 제안한 아프간 평화절차와 관련 아프간 제 정파 간 회합소집 계획을 환영하고 둘째, 아프간 국민의 새로운 과도정부 수립 노력을 지지하고 아프간군의 보복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아프간 국민들의 과도정부수립을 지원함에 있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확인하고 셋째, 유엔회원국들이 조속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quick-impact projects)의 이행을 포함 아프간 과도정부를 지원할 것과 아프간 국내외의 난민에 대한 긴급 인도적 원조를 시행하며 지뢰제거를 포함하여 아프간의 경제 및 사회재건을 위한 장기지원을 요청하며 넷째, 아프간이 더 이상 탈레반의 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아프간의 새로운 과도정부 수립을 위해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특히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 온 아프간 국민들의 의혹을 줄이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유엔은 안보리결의안 1378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민주정권이 확립될 때 까지 운영될 임시통치기구 구성을 위한 아프간 주요 4개 정치적 이익집단이 참여한 회의를 2001.11.27 ~ 12.5 간 독일의 본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아프간의 각 계 대표들은 임시통치기구(Afghan Interim Authority) 구성에 합의하고 신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본 합의서"(Bonn Agreement)에 서명하였는데 동 임시통치기구는 임시행정부, 긴급제헌의회 소집 특별위원회 및 대법원 등 3부로 구성되어 아프간의 새로운 민주적인 정권 창출을 향한 기반이 되었다.

나.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에 관한 고위급회담

유엔안보리 결의안(1378)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최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2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한 고위급 회담이 2001년 11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참가국가로는 G8 회원국, 화란, 스웨덴, 덴마크, 사우디, 터키, 한국, 중국, 인도, 스위스, 호주, 핀란드, 오지리, 노르웨이며 국제기구로서는 UNDP, OCHA, UNICEF, WFP, UNHCR 등이며 그 외 EU, OIC(의장국인 카탈), WB와 ADB가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의 중심적 역할, 국제사회의 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 간에 긴밀한 연계, 아프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참가국 및 국제기구 간 활동에 있어 조정의 필요성, 지원활동 참가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조이행 계획의 신축성 등 제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1)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회의개최에 대비, 일본, 미국, EU 및 사우디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2) 제 1차 운영위원회를 2001년 12월중 유럽에서 개최
3) 2002. 1 각료급회의를 일본에서 개최
4) WB, UNDP 및 아시아개발은행에 각료급회의에 보고될 포괄적인 원조수요 평가 보고서 준비를 요청
5) 동년 11.27-29간 WB, UNDP 및 ADB 3자간의 회의를 거쳐 아프간지원그룹(ASG)회의를 12.5~7 간 개최하기로 합의

2)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도쿄 각료급회의

아프간 재건지원에 관한 워싱턴회의(고위급 회의) 합의에 따라 일본, 미국, EU 및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한 각료급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2001년 1월 21~22 간 개최되었다. 동 회의기간에는 국제 NGO 회의도 개최되었으며 국제 NGO를 통한 협력방안도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61개국 및 21개의 주요 국제기구 및 EU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참가국 대표들은 아프간의 평화와 안전을 지원함은 물론 경제 및 사회재건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협의 초점은 참가국들이 아프간 재건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고 아프간의 제 정파 간에 합의를 본 본 합의서(Bonn Agreement)에서 규정한 평화의 절차(Peace Process)를 이행할 것과 대의제도를 확립하며 테러와 아편재매 및 마약거래를 근절하는데 협력할 것을 재건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편 아프간 과도정부는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재건지원 우선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분야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1. 공무원 보수지급과 정부행정 제도의 확립 등 행정능력 강화
2. 교육, 특히 여성교육
3. 보건 및 공중 보건
4. 도로, 전기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인프라 개발
5. 통화제도를 포함한 경제제도의 재건
6. 식량안보, 수자원 관리 및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 및 지역개발

도쿄회의를 통해 참가국과 국제기구들은 우선 2002년 중에 18억불 규모의 원조를 시행할 것과 이를 포함 향후 3년에 걸쳐 총 45억불을 지원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주요 서약내용은 일본이 2.5년간 5억불, 미국이 2002년 중 290백만불, 사우디가 3년에 걸쳐 220백만불, EU가 2002년에 5억불(EC는 5년에 걸쳐 십억 유로)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2~2004년에 걸쳐 45백만불(전체 서약규모의 약 1%)을 지원할 것을 서약하였다.

3)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한 베를린 각료급회의

2004년 3.31 ~ 4.1간 베를린에서 독일 및 아프간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한 아프간지원을 위한 각료급회의가 열렸다. 동 회의에는 65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정부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동 회의에서 특히 국제치안지원군(ISAF)의 계속적인 주둔, 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개발팀(PRT)의 지방에 대한 치안유지 활동 및 재건과 개발노력 지원, 2004. 6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한 제 1 단계 무장해제(DDR) 계획의 이행, 아프간 군과 경찰을 강화하고, 마약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 등 치안유지 및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지방의 치안유지와 동시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최초로 시도하는 PRT 활동을 NATO 주관하에 지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아편재배의 근절과 마약의 불법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참석 대표들은 2004~6년간 82억불의 원조를 공여하기로 서약하였으며 그 중 44억불을 2004년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고 아프간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4)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런던 각료급회의

2006.1.31~2.1간 런던에서 영국과 아프간 정부 및 유엔이 공동개최한 각료급 아프간 원조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반기문 장관은 회의 참석 외에 동 회의에 참석한 Hamid Karzai 아프간 대통령과 면담, 양국간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런던회의에서는 "본 합의서", 도쿄 원조국회의 및 베를린 원조국회의를 통해 아프간에 지원한 원조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가니스탄을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경제 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취한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는 아프간정부의 "새천년 개발목표"(Afghanist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ountry Report 2005, Vision 2020)를 달성하기 위한 "아프간 국가개발 전략"(the Afghanist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S)에서 밝힌 아프간 정부가 향후 5년간에 걸쳐 이행해야 할 내용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담은 "아프간 협약"(The Afghanistan Compact)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본문과 두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3개의 주요목표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Security), 둘째는 통치(Governance), 법치 및 인권(Governanc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셋째는 경제 및 사회개발(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이다. 한편 마약산업 퇴치도 강조되고 있다. 부속서 I 을 통해 AND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성과, 달성 기준 및 시한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Ⅱ를 통해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는 원조

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방향을 밝히고 있다.

회의 참석 국가 및 국제기구는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05억불을 지원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약 2천만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2. 한국정부의 대아프간 원조내용

한국정부의 본격적인 대아프간 재건지원 사업은 도쿄 각료회의 결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2001.11 아프간 지원을 위한 워싱턴 고위급회담 이후 아프간과 인접국인 파키스탄, 이란 및 우즈베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간 난민을 위한 긴급원조를 실시하였다. 동 긴급원조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Good Neighbors International(GNI)를 비롯한 국제 NGO 등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총 1,132만불 규모의 구호금과 구호품이 지원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미국의 대아프간 테러전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원조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 기간 중에는 총 59만불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 정부는 도쿄각료회의에서 서약한 45백만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원조규모와 경쟁력이 강한 분야를 고려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교육과 훈련, 의료와 보건, IT 등 전후 재건에 필수적인 프로젝트 사업, 둘째, 인적자원 개발과 특히 아프간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생 초청훈련 및 전문가 파견, 셋째, 아프간 정부의 기능과 공공서비스 능력향상을 위한 국산 기자재 공여, 넷째, 국제사회의 다자간 재건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기여 및 끝으로 NGO 지원을 통한 원조 등 공여의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하였다.

본란에서는 2002년 도쿄각료회의 이후 우리정부가 시행한 원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아프가니스탄 원조사업은 크게 나누어 프로젝트원조,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물자지원, 국제신탁기금에의 기탁 및 NGO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되는데 2002~2005년까지의 집행현황을 금액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출금액 (천불)	구성비(%)
프로젝트 원조		
- 직업훈련원	9,943	21.0
- 중앙공무원교육원	5,645	12.0
- 농촌개발사업(학교17,보건소8)	4,985	11.0
- 이브니시나 병원	3,159	7.0
- 중앙공무원 IT 센터	1,106	2.0
- 카불공대 IT 센터	2,119	4.5
- 이스탈리프 수력발전소	3,010	6.0
연수생 초청	2,261	5.0
전문가 파견	137	0.5
물자지원	7,207	15.0
아프간재건신탁기금	6,413	13.0
NGO 활동지원	1,581	3.0
합 계	47,566	100

2006년에도 대 아프간 지원 런던 각료급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바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원조는 계속되며 원조액은 194만불 규모이며 프로젝트 사후관리비에 1백만불, 연수생초청(40명)에

24만불, 전문가 파견(2명)에 3만불, 물자지원에 37만불 및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조사업을 유형별로 그 현황과 실적 및 앞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프로젝트 사업

1) 현황

■ 직업훈련원 건립
- 공기 : 2003.11.27 ~ 2005.6.30
- 대지 : 51,000 평방미터
  건평 : 9,993 평방미터(기숙사 포함)
- 건축, 컴퓨터, 전기, 배관, 자동차, 봉제 등 6개 공과로서 연간 400명 훈련

■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립
- 공기 : 2005.4.1 ~ 2006.12.4
- 대지 : 118,046 평방미터,
  건평 : 7,823 평방미터
- 연중 공무원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 연간 400여 명 교육 예상

■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카불 외곽 지역에 학교 14 동 건립
- 공기 : 2003. 1.5 ~ 2004.7.25
- 학교 규모 : 교실 10 ~ 12 개
- 동 학교는 비품일체를 갖추어 건립과 동시 인도되어 주재국 에서 관리, 운영

■ "이브니시나" 병원 신축 및 기존 병동 개량 및 보수"
- 공기 : 2003. 8.22 ~ 2004. 7.19
- 대지 : 1,375 평방미터
  건평 : 2,765 평방미터
- 병상 2개, 일반적인 외과수술 장비를 모두 갖춘 응급 환자진료 병원

■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카불외곽 지역에 학교 3동 건립
- 공기 : 2004.11.10 ~ 2005.9.30
- 대지는 일정하지 않으나 건평은 1,092 평방미터, 교실 12개와 비품일체를 갖춘 학교로 준공과 동시 주재국에 인도되어 관리되고 있음

■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카불외곽 지역에 보건소 8동 건립
- 공기 : 2003.1.5 ~ 2004.7.25
- 대지는 일정하지 않으나 건평은 245 평방미터로서 간이 진료 시설을 갖춤

■ 중앙공무원 IT 센터
- 공기 : 2003.9.18 ~ 2004.1.31
- 아프간 중앙행정개혁 및 인사위원회 소속 건물의 개량 및 보수를 통해 컴퓨터 및 인터넷 설치, 연간 약 1,500명의 공무원을 훈련

■ 카불공대 IT 센터
- 공기 : 2005.2.20 ~ 2006.3.15
- 공대 캠퍼스내 건평 978 평방미터의 훈련원, 컴퓨터 95대 및 인터넷설치로 공대생을 위한 IT 교육장소

■ "이스탈리프"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 공기 : 2005.4.10 ~ 2006.10.4
- 카불시 외곽 북부지역의 이스탈리프 계곡에

서 흐르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형 발전소로서 200kw의 전력을 생산, 인근 마을 62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

이브니시나 병원과 3개의 보건소는 GNI가 KOICA의 위임을 받아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으며 직업훈련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KOICA의 지원하에 공과별로 전문가를 파견, 자문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재국이 사후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대로 완전히 인도할 방침이다.

현재 시공 중이며 2006년 12월 준공예정인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2006년 10월 준공예정인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도 주재국이 관리능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 측에서 사후관리를 맡아 운영하면서 경영 및 운영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IT 센터는 사후관리를 통해 아프간 정부에 인도되어 아프간 정부가 자체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으며 카불공대의 IT 센터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대학 측이 자립 운영할 수 있을 시기에 이를 완전 인도할 계획이다.

2) 평가 및 고려사항

프로젝트 사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 교육, IT 및 에너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을 하였으며 아프간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의 프로젝트 사업의 품질과 효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기술수준이 높은 우리 건설회사가 발주처인 KOICA의 감독하에 시설의 설계, 건축 및 감리를 맡았고 장비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의 특징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능력과 시설과 기자재를 유지하고 보수 및 운용할 수 있는 관리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다. 당초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동 분야를 간과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 단계서부터 사후관리를 포함,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프로젝트 사업은 규모가 커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원국 입장에서는 이후 자력으로 여사한 동종 사업을 수행할 시 bench-marking을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원조국 입장에서는 원조국의 제반 기술수준을 포함한 산업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좋은 상징이 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조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원국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원조의 개념을 넘어 수원국에 원조국가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신뢰를 얻도록 함으로써 수원국 국민들이 원조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선진 원조국의 발달된 여러 형태를 스스로 배우려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원조사업은 원조국과 수원국 간 정부 간 협력은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끔 장기적인 협력증진의 관점에서 시설의 구조나 장비 및 건설과 사후관

리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통한 양질의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사업수행에 있어 사후관리를 제외할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정부 재정도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교육과 기술수준이 극히 빈약한 국가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시설과 장비가 방치되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주로 국제 NGO 등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국제 NGO가 이를 잘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조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국과 원조국간에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협력증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조국가의 원조단체 또는 NGO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우리정부의 의료시설 지원 사업인 카불시의 "이브니시나" 병원과 카불시 근교에 8개의 보건소를 건립하였다. 병원과 보건소를 모두 완공 후 주재국에 인도하였으나 주재국이 이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 정부에 사후관리까지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원조계획에 사후관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재국 정부는 지방의 의료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동 보건소 관리를 희망하는 외국인 NGO에 보건소 8개 중 5개의 사후관리를 위탁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NGO(이웃사랑회)가 병원과 나머지 3개 보건소를 한국국제협력단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게 되어 한국정부에 의한 원조사업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외국인 NGO의 관리하에 있는 5개의 보건소는 한국이 지원한 원조사업의 이미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연수생 초청

1) 현황

2002~2005년까지 공공행정, 행정발전, 경제개발정책, 병원관리, 컴퓨터 교육. 전력기술, 무역 및 투자진흥,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 통계기법, 결핵관리, 중소개업유성, 고위급 파트너십 과정 등에 걸쳐 약 470명을 초청, 훈련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도 총 17개 분야에 걸쳐 약 40명을 초청,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급파트너 과정은 아프간의 차관 및 주지사 들이 다수 참석하여 중앙행정은 물론 지방행정 발전에 있어 고위공무원 리더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평가 및 고려사항

동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개발도상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를 통해 느끼게 되고 전문지식과 경험도 전수 받게 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이룩한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감명을 받은 나머지 아프간의 개

발모델은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고위급 파트너십에 참석한 아프간 정부 고위인사들을 통해 주재국 정부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발전상이 깊게 알려지게 되고 아프간의 발전전략에 많은 교훈을 주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말에는 한국을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로 KOICA 동창회를 결성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주재국의 정세가 호전 되는대로 동창회를 구성, 한-아프간 우호 및 협력증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 실시를 함에 있어 아프가니스탄 연수생만을 대상으로 한 국별 프로그램이 있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아프간 연수생을 포함시키는 일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도국 간에도 발전의 차이가 크고 특히 오랜 내전으로 행정 및 일반 기술 수준이 극히 낮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국별 프로그램을 마련, 연수기간도 늘리는 등 배려가 있으면 연수 효과도 한층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전문가 파견

1) 현황

2002~2006년간 상하수도 관리, 보건 및 의료, 수질관리, 경제개발 계획, 정보통신 정책 등의 분야에 총 15명을 파견하였다

2) 평가 및 고려사항

전문가 파견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아프간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문가 파견은 연수생 초청의 경우 보다는 소수의 인력을 비교적 장기간 파견할 수 있고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자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 적합하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연수생 초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재국의 행정 및 전문 기술 분야의 수준이 타 개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전문가 파견도 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특히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경제 및 사회개발 등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 파견은 우리 정부의 정책입안에 자문을 해온 한국개발원(KDI)나 한국산업연구원(KIET) 등의 경험 있는 인사를 전문가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할 경우 주재국 정부 또는 유관기관과 우리 연구소간에 보다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양국 정부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 물자지원

1) 현황

인도적 지원으로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교육용 기자재, 공무원 출퇴근용 차량, 정부 사무실의 사무기기 등 많은 종류의 국산물품을 지원하였다. 국산물품 지원의 경우 가능한 한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했다.

2) 평가 및 고려사항

물자지원은 행정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요청되는 원조분야로서 특히 사무기기 및 운송수단을 각 행정부처에 원조한 결과 아프간 행정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산품의 우수한 품질의 홍보효과도 거양하였다.

물자지원의 경우 차량이나 일반 전기제품 등 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고급기술을 요하는 기자재의 경우 고장 시 수리를 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 ·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항 및 일부 청사건물의 보안 감식 장비를 지원하고 고장 시 수리를 위해 기술자 훈련도 시켰으나 현지인에 의한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차에 걸쳐 우리 전문가가 출장 · 수리를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작동방법 및 수리 등에 관한 지침서를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을 맺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자가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고객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 신탁기금 및 NGO를 통한 원조

정부가 KOICA를 통해 직접 시행한 이상의 주요 원조사업 외에 정부는 아프간 개발 신탁기금에 641만 불을 기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아프간에 대한 공동원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우리 NGO를 통해 아프간의 난민구호, 교육, 보건 및 의료, 지역개발 분야 등 총 36개 사업에 약 158만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NGO의 해외 협력사업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였다.

3. 대 아프가니스탄 원조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가. 테러리즘과 원조

아프가니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알카에다/탈레반 등 테러단체의 우선 공격목표가 외국군, 아프간 군과 경찰 및 고위 정부공무원을 포함한 아프간 정부, 외교관과 외국원조기관원, 아프간 정부와 외국군 및 기관에 협조하는 자 및 NGO 등으로 특히 외국원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아프간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우선적인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조활동에 있어서 안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외국정부의 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 NGO에 대한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장비로 경찰의 사기가 낮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상당부분, 사실상 전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조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은 물론 및 시설과 장비 및 자재 등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처음부터 원조계획의 주요 부분으로 검토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아프간에는 이에 대한 보험제도가 미비하고 외국 보험회사에 가입할 경우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입의 실익이 적다. 원조사업에 투입되는 물자의 구입이나 건설 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은 정부의 예산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실한 관리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원조사업은 사업과 안전 확보가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확실히 말한다면 안전확보 계획이 원조사업계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원국이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원조정책 수립에 있어서 안전 확보 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원조규모의 증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와 관련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도쿄각료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서약한 액수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약속 하였으나 베를린 회의와 런던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지원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원조예산의 제약 때문이다.

공적원조 규모는 한 나라의 대외 역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의존도는 70~80%,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91개 유엔회원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우리의 공적원조 예산규모는 2005년 국민소득(GNI)기준 0.094% 밖에 되지 않고 있어 같은 해 OECD 국가 평균 0.25 %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기술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의 발전상이 동국의 발전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한국과의 정부 간 협력은 물론 민간분야에서의 협력 증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적원조의 증대를 통한 민간분야의 협력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다. NGO 활동과 연계 강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동서문화교류협회(ECC),이웃사랑(GNI), 한민족복지재단(KFWA),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IACD), Global Care for Afghanistan, Harvest Korea, 개척자들, 선한사람들 등 한국 NGO 소속원 80 여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다국적 NGO에 근무하는 사람도 20 여명에 이른다. 또한 일부는 가족을 동반하고 있어 가족까지 합하면 NGO에 종사하는 한국인

인력은 약 130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 NGO는 그 간 봉사활동을 통해 주재국 국민들과 친밀하고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현지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이 3~5년간 이 곳에서 장기간 봉사해 온 사람들이고 길게는 8여 년간을 계속 생활해 온 인사도 있기 때문에 한국 NGO의 아프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높이 평가된다.

정부가 공적원조를 NGO와 협력하여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로 NGO 요원들의 장기 근무로 축적한 주재국에 대한 이해 및 원조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정부의 원조자금과 NGO의 matching fund를 활용할 경우 프로젝트 당 원조규모를 늘일 수 있어 원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로 NGO는 현지 NGO 및 기타 현지인을 활용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KOICA 사무소의 제한 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원격지 또는 오지 등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넷째로 NGO의 활동 규모와 범위의 확대는 NGO의 역량증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NGO 활동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NGO 소속원들이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동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나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외 선교 활동 등을 겸하여 현지인과 마찰을 빚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한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NGO와 원조사업을 협력하여 시행할 경우, 또는 NGO 사업에 대해 자금만 지원할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 간 아프가니스탄 원조사업을 위해 국내 NGO에 대한 지원은 2002~2003 간 36개 사업에 150 만불 상당이 되나 아프간의 정세 악화와 원조자금의 부족 등으로 그 이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문화 및 스포츠 분야 등 원조의 다변화

위의 원조사업 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원조사업은 문화 및 스포츠 분야가지 보다 넓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각 국의 원조정책은 수원국의 수요, 원조국의 대외정책, 공급분야의 경쟁력 등 제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대외정책에 있어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문화 및 스포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제고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흔히 일컫는 이유도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는 물론 연간 1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등 국민생활도 그 무대를 전 세계로 향해 계속 높여 가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국가의 이미지 고양문제는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원조에 있어서도 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협력과 관련, 아프가니스탄에 태권도 진흥을 도왔으면 하는 의견이다.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고 주재국이 국제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유일한 종목도 태권도이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으로서 태권도 인구가 3만여명을 헤아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배운 인사들이 외국 정부가 지원하는 태권도와 유사한 무술 종목으로 변신하여 도장을 열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마. 원조의 효율성 제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와 관련 주재국 정계, 정부 및 일반국민들이 갖는 가장 불만은 원조사업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안전이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선진 외국기업의 진출이 거의 없고 주재국 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떨어진 결과 다수 원조사업이 외국 NGO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NGO는 인접국에서 진출한 기업에 하청을 주고 동 기업은 또 다시 현지 기업에 하청하는 방식으로서 이 과정에서 NGO들이 많은 몫을 차지한 결과 부실한 사업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재국은 외국정부의 원조를 가급적 아프간정부를 통해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NGO의 활동 분야 중 건설업은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조국 정부의 협조가 없는 한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원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진출 기업이 이를 수행한 결과 주재국의 불만을 사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조금액의 누수현상 없이 양질의 원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나 국민들은 외국원조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 작은 하자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조사업의 질적 수준은 물론 우리의 원조사업이 국제 NGO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원조액이 주재국을 위해 지출된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맺는 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와 관련 원조형태별 내용, 문제점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술을 해 보았는데 이상에서 빠진 몇 가지 내용을 추기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정부의 대 아프간 지원과 관련 KOICA를 통한 정부의 공적원조사업 외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국군지원단의 파견을 빼 놓을 수 없다. 한국군지원단 200여명이 동맹군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으며 이 중 동의부대(의료단)는 2002.2부터 다산부대(공병)는 2003.2부터 지금까지 카불 북부 지역 80km 지점에 위치한 바그람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임무로 공병부대는 동맹군이 사용하는 공군기지의 시설물 건설 및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의부대는 동맹군과 현지주민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동의부대의

주된 진료대상은 인근지역 아프간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그 동안 20만 명이상의 진료 실적을 보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특히 프로젝트형 원조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현지 문화, 환경, 관행 등에 충분한 이해와 사전조사가 필요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자연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나 기후의 변화가 공사과정에 주는 충격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일례로 아프간의 경우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토사 및 돌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기후 등도 공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 대한 훼손이나 개인 소유물을 침범한 경우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성이 강한 주민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침해에 대한 개별적 보상방법 협의와 같은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상절차와 공사시행을 연계하는 방법도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 아프간에서의 프로젝트 원조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시행착오 등이 잘 축적되어 다른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원조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법제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를 찾기가 어렵고 적용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가능한 한 세세한 분야에 걸쳐 상세해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을 주는 불법 시설물이 있다하더라도 법치주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수원국 정부가 이를 쉽게 철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조사업 타당성 조사 시부터 이러한 문제도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해결방안이 이해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넷째, 그간 아프간에 지원한 원조는 모두 무상원조였으나 정부는 원조예산의 제약으로 2006년 런던회의 시 유상 및 무상원조 2천만불 공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재국의 재정형편상 중단기적으로는 대외채무변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이며 장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전망이 여타 최빈국의 예와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간 국제사회가 대부분의 최빈국에 지원한 유상원조는 Paris Club 회의 등 다자간 협의나 기타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탕감되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국토 및 인구를 고려 1천만불 규모의 연성차관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EDCF 차관의 조건에 비추어 수원국의 적극적인 호응도 얻기기 쉽지 않다. 따라서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유상원조보다는 규모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원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을 함께 고려함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치안사정 악화를 고려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 등 기타 우리기업의 투자를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원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국별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고 이들 기업과 원조 및 투자사업에 관한 협의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원조 증대가 바람직하기는 하나 원조예산 규모를 늘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작은 규모의 원조에 의한 개발효과보다는 민간기업의 투자진출을 통한 효과가 큼을 감안해야 한다.

끝으로 원조사업은 그 자체가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가급적 많은 양의 원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원조예산의 제약 때문에 쉽지가 않다. 대신 원조가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양질의 원조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서 빠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환경과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를 조정하고 또는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작은 규모의 예산 절약을 이유로 이에 인색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2 AM 페이지 22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권 율 / KIEP 책임연구원

1. 머리말

밀레니엄선언이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개도국 빈곤퇴치문제가 국제개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기관과 원조공여국들은 원조규모의 증대와 함께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스템을 큰 폭으로 개혁하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성과중시형 ODA가 강조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지원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고, 개별사업 중심에서 정책, 프로그램 및 부문별 평가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개발협력의 추세와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2005~09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ODA/GNI 비율을 2009년까지 0.1%로 확대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양적 규모 확대에 대비한 대외원조체제 및 관련 정책의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조규모의 양적 규모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체계적인 방향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대개도국 지원사업의 기본방침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개혁과 ODA 운용체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조사업 및 관리체제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이는 평가결과의 피드백과 교훈이 적절히 활용됨으로써 ODA사업의 관리체제가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관련 부처 및 원조집행기관의 경우 별도의 평가팀이 부재하거나 인력 및 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서남아팀장, 경제학박사

** 본고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강원대 공동주최 심포지엄(2006. 9. 4)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 보완한 것임.

산이 충분치 않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방식이 기본적으로 투입과 산출중심의 관리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결과중심의 관리(Result Based Management: RBM)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결과중심의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사업운영 및 관리체제가 보다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사업 평가에서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계획수립, 실시,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는 유기적인 ODA 사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ODA 정책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OD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대내외적인 개발협력정책 환경변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결과중심의 평가체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결과중심의 관리(RBM)가 강조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ODA 평가관련 주요이슈와 쟁점

그동안 OECD를 중심으로 원조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 향후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미 1970~80년대 개별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지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원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상태의 개선을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바 있다. 특히 OECD/DAC는 1991년에 '개발원조의 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발표한 바 있고, 1996년 5월 DAC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신개발전략)'에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WB의 포괄적 개발체제(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등이 채택됨에 따라 개별 원조사업을 개도국의 중장기 국가개발목표와 빈곤퇴치전략보고서(PRSP)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조평가에 있어서도 정책 및 프로그램 수준의 거시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원조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결과중심의 관리(RBM) 방식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DAC는 peer review를 통해 회원국들의 원조활동 평가체제가 전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정성과 독립성,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내부에서 얻은 학습효과

(internal lesson-learning)와 외부에 대한 책임감(external accountability)의 조화, 피드백 및 평가 결과를 수원국과 공유, 수혜자 참여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DAC는 각국이 원조평가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1)]

DAC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원조국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DAC는 1981년 '평가 Correspondent 그룹'을 설치하여 평가수단이나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고, 동 그룹은 2003년에 'DAC 개발평가 Network'로 개편되어 현재 공동으로 목표를 공유하는 복수 원조기관의 동일한 평가활동, 또는 한 수원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원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aggregate evaluation), 여러 공여국이 공동으로 단일 국가에서의 단일 활동을 평가하는 공동평가(joint evaluation)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평가 혹은 공동평가가 늘어나는 것은 개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평가 및 공동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접근법(partnership approach)이 유용하고, 공여국 원조 프로그램과 수원국 빈곤퇴치전략과의 조응(alignment)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조 프로그램의 공동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조활동 평가는 원조 프로그램이 밀레니엄 개발계획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가. 평가의 주요 기준

OECD/DAC는 1991년 "개발협력의 평가원칙"에서 평가란 '현재실시 중이거나 또는 종료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계획,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개발협력사업의 5대 평가기준(criteria for evaluation)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적절성(relevance)은 수원국 및 공여국의 우선순위(priorities)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원조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전지구적 과제와의 합치성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중기 원조정책 혹은 국별원조계획과의 부합성, 원조정책의 전반적 기조와의 관련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수원국의 요구(need)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성(efficiency)으로서 투입된 자원에 대비하여 원조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원조활동의 비용, 원조 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대안적인 방법과 비

1) OECD/DAC (2005) 참조.

교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효과성(Effectiveness)은 원조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설정된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투입과 산출실적을 비교한다. 특히 목표의 달성 혹은 미달성에 어떤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중점을 둔다.

넷째, 파급효과(impact)를 통해 원조사업의 결과 직간접으로 초래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개발성과의 변화 및 중장기적 효과를 판단한다.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사업이 수혜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 변화를 초래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통해 공여국의 지원이 종결된 후에도 원조사업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시간경과에 따라 순익의 변화를 주변여건의 환경변화 및 재정적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혜택이 지원 종결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원조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판단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ODA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PCM(Project Cycle Management) 방식으로서 프로젝트의 계획 → 실시 → 평가라는 일련의 사이클을 PDM(Project Design Matrix)라 불리는 프로젝트 개요표를 사용하여 운영 · 관리하고 있다. PDM에는 프로젝트 구성요소인 목표, 활동, 투입과 함께 프로젝트의 외부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논리적 상관관계(Logical Framework, Logframe)가 나타남으로써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의 상호관계를 통해 일관된 운영관리가 가능

〈표 1〉 DAC의 원조사업 5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적절성 (relevance)	- 수원국의 요구 및 공여국의 우선순위나 정책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 중기원조정책 혹은 국별원조계획과의 부합성, 원조정책의 전반적 기조와의 관련성 여부
효율성 (efficiency)	- 투입된 자원에 대비하여 원조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
효과성 (Effectiveness)	- 원조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 목표의 달성 혹은 미달성에 어떤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가
파급효과 (impact)	- 원조사업의 결과 직 · 간접적으로 초래된 개발성과와 변화 및 중장기적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 사업추진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사업이 수혜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 변화를 초래했는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공여국의 지원이 종결된 후에도 원조사업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혜택이 지원 종결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가를 검토

자료: OECD/DAC (1991)을 토대로 작성.

하게 된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독일, 일본 등이 이러한 Logical Framework를 평가기법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계획단계에서 Workshop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참가형 계획(Participatory Planning)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PDM을 중심으로한 PCM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PCM 기법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투명성의 확보, 경험의 공유, 수원국과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조사업 전과정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별사업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PCM 기법을 거시적 평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각국은 정책, 부문, 프로그램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Strategic Approach)을 통해 평가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적정 평가기준 설정 및 평기기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로그프레임을 토대로 LEAD(Log-frame Evaluation Application Design) 방식의 정책 및 프로그램 기법을 개발하여〈표 2〉와 같이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시 적용할 수 있는 로그프레임을 활용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과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에 기반하여 성과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계획과 모니터링에 역점을 두고 있고, 캐나다도 RMAFs(Results-based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Frameworks)을 발표하여 계획, 실시, 모니터링, 계측, 평가, 결과보고라는 일련의 관리체계를 중시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도 결과중심의 관리체제를 토대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표 2〉 로그프레임의 기본적 구조 정책/프로그램 요약

<table>
<tr><th>정책/프로그램 요약</th><th>성과지표</th><th>지표입수방법</th><th>외부조건</th></tr>
<tr><td>전체목표 (Overall Goal)
- 정책/프로그램이 기간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td><td>- 정책/프로그램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td><td>- 지표를 얻기 위한 자료 입수원과 방법</td><td>- 정책/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td></tr>
<tr><td>직접 목적
-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td><td>- 각 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td><td>- 지표를 얻기 위한 자료 입수원과 방법</td><td>-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목적외에 필요한 조건</td></tr>
<tr><td rowspan="2">활 동
- 직접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및 사업 명기</td><td colspan="2" rowspan="2">투 입
- 좌측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인력, 자금, 시설 등을 명기</td><td>- 직접 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 외에 필요한 조건</td></tr>
<tr><td>전제조건
- 프로그램 개시전에 만족해야 할 조건</td></tr>
</table>

주: FASID (2005), p. 26 참조하여 재작성.

나. 평가의 종류

평가는 실시시기, 평가자, 대상,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실시시기면에서 보면, 사전평가(Preliminary, ex-ante, evaluative assessment or appraisals)는 사업디자인과정과 사업수행허가 사이에 시행된다. 파트너국에게 요구되는 협력의 적절성 및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사업시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중간평가(interim evaluative

〈표 3〉 평가대상 및 분류

〈시 기〉	●사전평가 (ex-ante evaluation) : 개발활동 실시 전에 행해지는 평가. ●중간평가 (mid-term evaluation) : 개발활동 중간단계에 행해지는 평가.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 개발활동이 종료한 후에 행해지는 평가.
〈평가자〉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 : 원조국, 파트너 또는 원조실시에 관계된 조직의 경영부문에 대한 정보를 실시 부국 및 개인에 의해 실시되는 개발활동 평가.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 : 원조공여국이나 원조실시와 관계된 조직 이외의 조직 및 개인에 의해 실시 ●독립평가(independent evaluation) ●자기평가(self-evaluation) : 개발활동의 계획 및 실시에 관계된 사람에 의한 평가. ●합동평가(joint evaluation) : 다른 복수의 원조기관 및 파트너가 참가하여 실시하는 평가. ●참가형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 원조기관 및(수익자를 포함)이해관계자의 대표가 공동으로 평가를 계획, 실시, 해석하는 평가 방법
〈대 상〉	●테마별 평가(thematic evaluation) : 복수의 나라, 지역, 분야에 걸친 특정 개발중점사항에 관한 모든 개발활동을 추출한 것에 대해서 실시하는 평가. ●국별 프로그램평가/국별 원조평가(country program/assistance evaluation) : : 어느 나라에 있어서 단독 또는 복수의 원조국의 개발활동 포트폴리오 및 그 개발지원의 배경에 있는 원조전략의 평가. ●부문프로그램 평가(sector program evaluation) :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에 적용하고, 한 나라 내부 또는 복수의 나라에 걸쳐 특정부문에 있어서 개발활동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클러스터 평가(cluster evaluation) : 관련된 활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하나로 정리하여 평가하는 것.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 지구규모, 지역별, 국별, 분야별 등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리된 일정의 활동평가 ●프로젝트 평가(project evaluation) :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며, 이 개발활동은 특정 자원과 실시기간 내에 또는 때때로 보다 폭넓게 미치는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것임.
〈기 능〉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 실적(performance)의 개선을 의도하여 행해지는 평가이며, 그 대부분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실시단계에서 행해짐. ●프로세스평가(process evaluation) :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내부의 역학, 정책수단, 서비스제공의 메카니즘, 운영실시 등에 대한 평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 활동의 종료 시(또는 활동의 특정 단계)에 당초 짜 넣어진 outcome(성과)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메타평가(meta evaluation) : 일련의 평가에서 평가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 질의 판단 및 평가 실시자의 실적(performance)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에 대한 평가.

자료: OECD/DAC (2002).

reviews)는 주로 사업추진 중 수행되는데,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에 대해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and impact assessments)는 사업수행이 끝난 후 실행되며 Ex-post evaluation은 DAC의 사업타당성, 사업수행효과, 목표달성도, 사업실시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의 범주에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산출물과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실행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사업수행(implementation)과정에서 실시되며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사업개선방안연구를 위해 시행된다. 반면에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사업의 유효성(effectiveness)판단과 사업결과 및 총체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사업추진이후 시행된다.

다. 평가와 모니터링의 관계

정부의 원조사업을 비롯한 공공사업 수행에 있어 모니터링과 평가는 모두 사업의 지출, 수익, 활동사항, 제품 서비스 생산 현황 및 그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Monitoring)은 ODA 사업의 책임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현재 사업 상황(사업의 진행상황, 목표 달성정도 및 지출된 자금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지수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지속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평가(Evaluation)는 ODA 사업의 목표 부합성 및 달성 여부,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그 계획, 수행 및 결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표 4〉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비교

모니터링	평 가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임	일시적이고 특수함
프로그램 목표는 주어진 그대로	프로그램 목표는 더 상위에 있는 목적이나 개발문제에 관련하여 평가됨
제시된 지표를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임	제시된 지표의 유효성과 타당성 제고
적은 수의 일부 사항들은 무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룸
의도된 결과에 초점	의도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동일시
Quantitative methods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s
관례적인 자료수집	데이터 자료가 다양함
발생 원인에 대한 해답 제공 못함	발생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제공
보통 internal management 기능	외부 평가자나 외부기관에 의해 평가됨

자료: SIDA (200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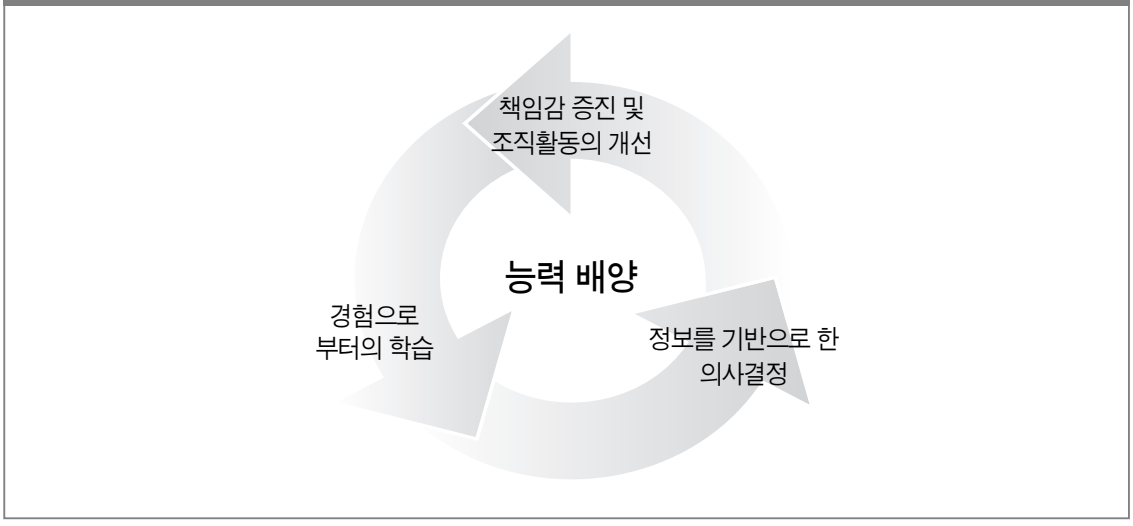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능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은 사업목표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점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서 원조사업 및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기록하여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에 평가는 모니터링에서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목표가 왜 달성되지 못했는지 또는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강조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가작업은 모니터링 단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특정 결과의 도출 성공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정보는 평가 수행의 기초가 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되는 새로운 정보는 평가의 기준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구분된 절차로 인식하여 독립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보다 두 절차 간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원조사업의 질적 향상과 평가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피드백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모니터링과 평가의 상호보완성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조사업의 설명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조직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M&E를 통해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지게 되고,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조정책 및 ODA 사업의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완료된 사업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는 피드백을 통해 향후 ODA사업 추진

〈그림 1〉 M&E의 목적 및 역할



• 자료: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Results

및 실행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성과나 사업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ODA 평가체제에 있어서 능력배양은 중장기적으로 ODA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운용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여 사업관리체제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라. 결과중심의 관리(R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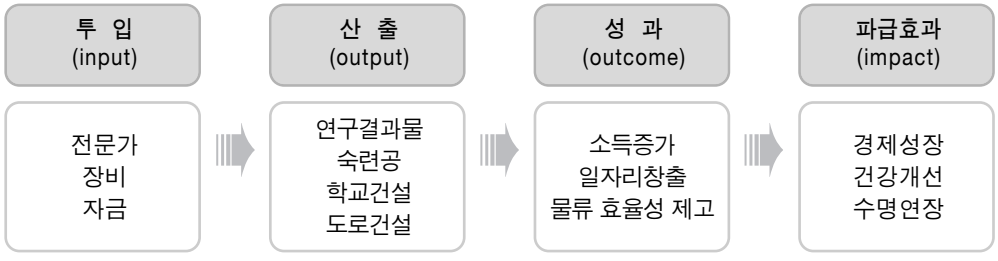
과거엔 모니터링과 평가가 산출(output)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결과중심의 관리(RBM)가 강조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 역시 결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 UN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통해 달성해야 되는 타깃이 동시에 제시됨으로써 ODA사업이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결과중심의 원조관리방식은 과거 수행 중심의 관리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조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개발원조기관에서도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개발협력청에 부서를 개설하여 평가계획을 세우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과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초점은 모두 성과(outcome) 또는 파급효과(imapct)에 맞추어져 있다. 결과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과 평가는 종국적으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사업 대상의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업수행자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산출(output)은 사업의 수행의 생산물 및 서비스이고, 성과(outcome) 또는 파급효과(impact)란 그 생산물을 통해 이루어진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원조사업을 통해 일국에서 학교 건설 또는 도로 건설, 직무교육 실시

〈그림 2〉 원조 사업 평가의 주요 개념



자료: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Results

로 숙련공 배출은 산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 물류 망 효율성 제고, 소득 증가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성과에 해당된다. 이 성과의 장기적 영향으로 국민의 건강이 개선, 수명 연장은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산출에 중심을 둔 모니터링과 평가는 공공사업 수행자가 무엇(what)을 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결과에 중심을 둔 모니터링과 평가는 공공사업 수행자가 사업 수행으로 생산한 산출이 종국적으로 어떤 변화(so what)를 일으켰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산출 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공공사업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행과정과 책임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수행자에게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공공사업 수행으로 사업 대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결과(성공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과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공공사업 수행자의 실질적인 사업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DAC의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이 현재 WB, UNDP, 호주 등 많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서 동시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초점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WB은 개발협력 부문에서 평가의 제도화와 단계화를 꾸준히 이끌어 온 국제기구로서, WB에서 제공하는 평가의 구조적 틀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평가 시스템의 단계별 분류를 파악할 수 있다.

WB의 관리와 평가(Management & Evaluation)는 결과중심의 M&E과 유사한 목적중심의 평가(Objective based Evaluation)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을 위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나, 모델에 상관없이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WB은 상기 핵심 6가지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10단계 모니터링과 평가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림 3〉의 모니터링과 평가 10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평가(Readiness Assessment)부터 시작해 총 10단계로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 10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각 단계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된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결과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로의 전환은 예산이나 인적자원 외에도 정치적 지지,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동기와 수행 의지가 부족할 경우 제도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과중심 평가로의 전환의 동기 및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구조 평가를 통해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련된 예산과 그 외 자원 배분에 대한 검토 및 모니터링과 평가 중복성 등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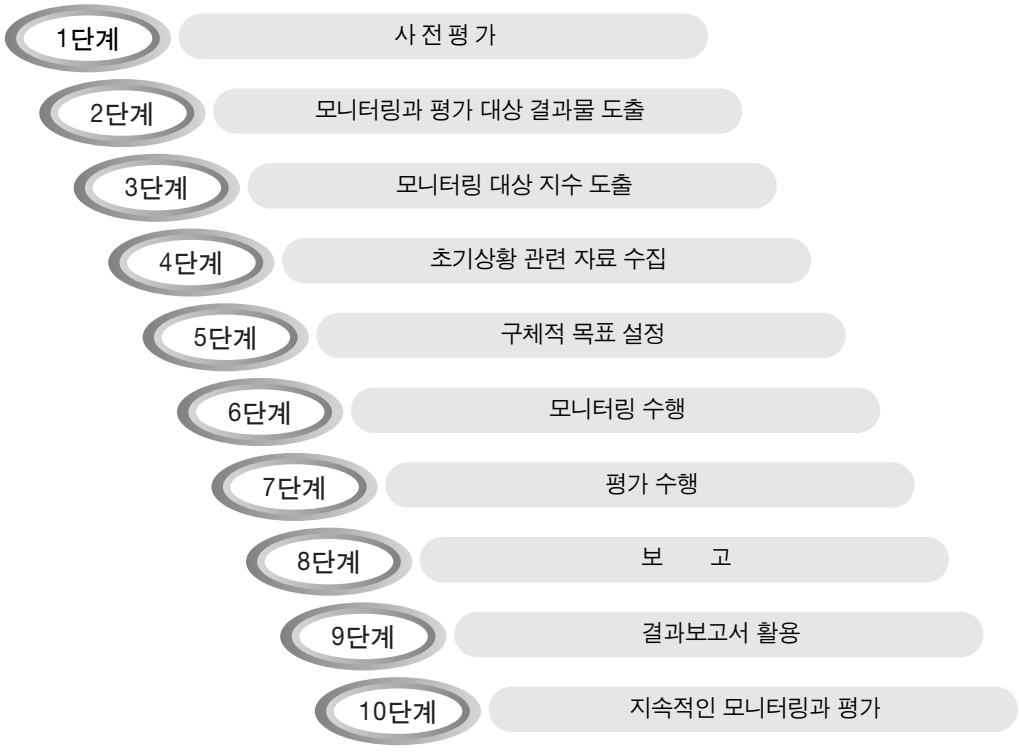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사업 평가는 EDCF와 KOICA가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 및 내부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ODA 평가는 개별적인 프로젝트별 사업평가가 대부분이고, 2004년 감사원의 ODA 정책감사가 추진되어 원조사업 형태별 평가가 시범적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정책평가라기보다는 원조관련 부처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둔 바 있다.

특히 무상원조 사업시행 기관중 KOICA를 제외한 여타 부처들의 경우, ODA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부처들도 전체적인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가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투명성

〈그림 3〉 WB의 모니터링과 평가 10 단계



자료: World Bank (2004), Ten Steps to a Results-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제고 차원에서 정책평가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앞으로 OECD DAC 가입준비 차원에서 효과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평가시스템은 DAC 가입요건의 하나로서, DAC 회원국들은 원조 효과 증진차원에서 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흐름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평가방식과 기준이 산출(Output)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선진원조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성과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제도화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DA 평가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의 원조환경을 고려한 평가지침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관련 정치 ·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국제적 ODA 평가 기준과 우리나라 원조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적정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성장단계에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감안,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의 적절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ODA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되, 초기단계에는 사업수행 부서에 평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평가업무지원 및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평가, 참여형 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ODA 평가체계 확충을 통한 평가결과의 피드백과 사업교훈이 ODA 실시체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최근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RBM이 강조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평가형태 및 대상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사업 평가는 담당부처 주관하에 실시기관이 수행하고,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평가로는 중점과제별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점과제별 평가는 중기원조계획의 중점과제나 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분야별 이니셔티브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빈곤삭감이나 개도국의 여성지원(WID)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 · 무상원조 각각의 중기정책(유상원조는 '06 ~ '09 EDCF 운용전략계획, 무상원조(KOICA)는 '06 ~ '08 중기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와 동 중기정책에 입각한 정책성과 평가도 가능하다. 금년중 '07 ~ '09 ODA 중기전략 수립 후에는 동 중기전략을 대상으로 정책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정책평가 중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은 국별평

가라고 할 수 있다. 국별평가는 국별 원조정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별 원조방침이나 국별원조계획이 대상이 된다. 현재 중점지원국에 대한 지원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 수립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평가로는 부문별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부문별 평가는 기본적으로 1개국, 1부문에 있어서 ODA활동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정 수원국에 있어서 의료, 보건, 인프라라고 하는 부문별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그와 같은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문에 있어서의 ODA 활동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중 하나로 형태(scheme)별 평가도 가능하다. 형태별 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조형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술협력(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등), 무상자금협력, 유상자금협력 등 사업형태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달리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중간, 사후라고 하는 사이클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이나 사후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어디까지나 형태의 현황을 검증하고, 그 수정을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차원 평가는 개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관련부처 및 실시기관(KOICA, EDCF)이 중심이 되어 자율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ODA 수행기관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실시하며, 재경부와 외교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DFID의 경우 백만 파운드 이상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외무성의 경우 평가대상 프로젝트는 10억엔 이상의 무상원조와 150억엔 이상의 차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평가 운용체제 및 절차

현재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전담 기구로 '평가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평가소위를 중심으로 평가항목,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하여 유·무상원조의 목적·특성을 반영한 평가지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중기계획 및 연차계획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평가지침하에 3~4년간의 계획으로 평가중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이 되는 국가, 과제, 부문 및 형태를 선정하고, 평가방식 및 평가참여자를 결정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부처보다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의뢰하고, 동 작업반에서 주관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합동평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원조국, 국제기관, NGO 등 외부기관의 직원과 평가소위 구성원이 주관자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평가주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국정부 · 기관평가의 경우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수원국과 협의를 실시, 평가주관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안 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주관자는 평가소위와 협의하여 각 평가의 실시계획안을 작성, 평가의 목적, 대상, 실시기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소위는 평가주관자의 주도하에 정보수집을 하는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평가팀을 편성하게 된다. 평가팀 편성은 제3자 평가, 합동평가, 피원조국정부 · 기관평가에 의해 다르지만 주로 정보수집이나 분석의 전문가로서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에는 유상원조는 재경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자체평가를 한 후, 동 결과를 '평가소위'에 제출하면, 재경부와 외교부의 자체평가는 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기금평가를 토대로 원조집행기관의 프로젝트 평가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평가소위'는 매년 부처의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요 정책과제 중 특정분야(1-2개)를 선정, 정책평가 혹은 프로그램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디자인 책정 → 평가조사 → 정보수집 및 분석 →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평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디자인 책정은 평가팀이 구성되면, 평가팀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가주관자와 평가소위가 작성한 평가실시계획안을 토대로 평가의 목적, 대상, 실시방법 등을 책정한다. 우선 평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가대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수집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이 파악되면 다음으로 평가의 기준이나 분석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평가의 대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설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조사업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의 단계에서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정책의 책정이나 실시에 관련된 관계자에게 정보를 얻어 목표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디자인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자금 가운데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국내조사를 중시하고, 현지가 아니라면 입수불가능한 정보 등은 현지에서 수집해야 한다.

평가팀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결과와 제언을 정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정책차원이나 프로그램차원의 평가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OECD/DAC가 91년에 발표한 평가 5개항목(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근거

로 프로젝트별 평기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정책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목적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적절성(효율성), 결과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보고서는 정책결정자에게 정보제공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될 수 있는 한 풍부한 데이타를 게재하고, 데이터부족 등에 의해 당초 예정했던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평가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라.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소위의 검토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회에 보고되고, 우리나라 및 수원국의 ODA 실시기관에 대해서 피드백되어 보다 효과적 · 효율적인 ODA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 ODA정책담당자 및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소위 주관하에 ODA평가 검토회의에서 평가결과의 피드백과 대응책이 결정되고, 수원국 관계자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배포나 평가 피드백 세미나 등을 실시, 평가결과를 피드백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피드백의 경우 우리나라의 ODA정책책정자 및 실시기관에 대한 피드백은 평가소위 주관하에 ODA평가 내부검토회의에서 매년 1~2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내부검토회의에서는 당해연도에 실시된 평가에서 얻어진 평가결과와 제언이 보고 되고,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과가 제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DA는 수원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피원조국의 ODA관계자에 대해서도 피드백될 필요가 있다. 평가소위는 수원국에 있어서 평가 피드백 세미나의 개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통해서 수원국에 대한 피드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피드백 세미나는 평가보고서가 끝난 후 평가대상인 수원국에서 실시되고 있고, 평가팀이 피원조국의 ODA관계자에 대해서 평가결과나 제언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함과 동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화를 통한 이해 촉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이해 촉진을 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프로젝트차원까지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KOICA, EDCF, 연구소 등과 제휴하여 합동평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 정책과제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평가기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ODA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로그프레임(Logframe)에 토대를 두고 PCM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프로젝트의 계획 → 실시 → 평가라는 일련의 운영체제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은 국제적으로 확

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평가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적정 평가기준 설정 및 평기기법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결과중심관리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과 평가체제의 특징은 수행전략 및 수단 → 타깃 → 성과 → 파급효과 라는 사업 효과 발생의 고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모니터링 접근법으로서 모니터링과 평가의 상호보완계가 ODA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법의 미비외에도 정책적으로 평가중기계획이 미비하여 평가의 지속성, 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가이드라인 작성시 3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평가중기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1차 중기계획 완료시점('09년)을 목표로 평가예산, 평가인원 증대 및 평가체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평가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작성하여 평가전담 조직, 평가예산 등 평가인프라 구축 방안, 평가기법 선진화 및 평가인력 전문화를 위한 중기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평가예산에 ODA 총액의 0.06~0.46%에 달하는 상당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적정 평가예산을 반영하고, 평가전담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산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결과중심의 관리가 강조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표 5〉 주요 원조공여국의 ODA 평가예산 (2004년)

국 명	평가예산(A)	ODA 규모(B)	A/B (%)
호주	90만 달러	1460 m$	0.06
아일랜드	75만 유로	607 m$	0.17
룩셈부르크	80만 유로	236 m$	0.46
오스트리아	40만 유로	678 m$	0.08
덴마크	320만 달러	2037 m$	0.15
일본	680만 달러	8906 m$	0.07
네델란드	300만 유로	4204 m$	0.09

• 주 : 유로/미달러(2004년 연말환율 1.36)
• 자료 : OECD/DAC(2006), DAC Evaluation Network Mini-Survey 결과를 재정리.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RBM방식의 평가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결과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초점은 모두 성과 또는 파급효과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목표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점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는 모니터링에서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목표가 왜 달성되지 못했는지 또는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강조되는 판단임을 고려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체제의 종합적 구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2 AM 페이지 38

[참 고 문 헌]

권율. 1995.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999.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방향』. KIEP.

2000. 『공적자금의 연계를 통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추진방안』, 이창재 · 안응호 공저. KIEP.

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KIEP 세계경제』. 제5권 제9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2.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OECD 논의」. ?OECD Focus 7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우리나라 ODA의 통계작성 및 추계방식의 개선방안』.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용역보고서.

2004.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권율 外. 2002. 「유엔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제5권 제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지속위 자료집 2004-24, 공저.

2005. 『개발조사사업 확대발전방안』. 한국국제협력단.

Ashman, Darcy. 2000. *Promoting Corporate Citizenship in the Global South*.

Boston: 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Boston: 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AusAID. 2003.7 Procedures for Rapidly Reviewing the Quality of Australian Aid Activities.

2005a. Evaluation and Review Series No. 38.

2005b. Rapid Review of Quality-at-Entry(QAE) 2004: Innovative activity design.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2004a.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 2004*.

Ottawa: CIDA.

2004b. *CIDA Evaluation Guide*. Ottawa: CIDA.

2006. *How Canada Can Improve Its Development Aid-Lessons from other aid agencies*. (C.D. Howe Institute Commentary no.232).

Cassen, Rebort, Does *Aid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Charles, Chanya L. 2001. Learning from Experience: USAID and Inter-Sectoral Partnerships. Washington D.C.: USAID.

DFID. 2004. *Evaluation Framework for General Budget Support*.

2005. *Guidance on Evaluation and Review for DFID Staff. London*.

2006. *Evaluation of DFID Country Programmes: Country Study Bangladesh (2000~2005). London*.

FASID. 2005. *The User Guide to Log-frame Evaluation Application Design. Tokyo. Japan.*

Gupta, Kanhaya L. 1999. Foreign Aid: *New Perspectiv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Lancaster, Carol. 2000. *Transforming Foreign Aid: United States Assistanc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ishigawa Akira and Shimomura Yasutami. 1999.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Assistance.* Tokyo.

OECD/DAC,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2003.

1991.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8.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2002a *Evaluation and Aid Effectiveness.*

2002b.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

2004. ODA Statistics for 2003 and ODA Outlook. Paris.

2005. *Managing Aid.*

2006. DAC Evaluation Network Mini-survey Summary of Member Responses.

Sachs, Jeffery D. 2005. "The Development Challenge." *Foreign Affairs,* Volume 84, Issue 2. New York.

SIDA. 2003. *SIDA's Evaluation Plan 2004.*

2004. *Looking Back, Moving Forward,* Sida Evaluation Manual.

2005a. *SIDA's Evaluation Plan 2006.*

2005b. *Sida's Management response System.* Anders Hanberger,I Ljell Gisselberg, Sida Studies in Evaluation o6/01

2005c. *SIDA* Annual Report.

UN. 2005.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Results.* New York.

World Bank. 2004. *Ten Steps to a Results-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http://www.acdi-cida.gc.ca
http://www.ausaid.gov.au
http://www.deza.admin.ch
http://www.dfid.gov.uk
http://www.hm-treasury.gov.uk
http://www.oecd.org
http://www.sandrp.in
http://www.sida.org

Ⅱ. KOICA 업데이트

1. 세계 빈곤퇴치와 한국의 역할
   : “ 한국적 제3의 길” 국회토론회

2. KOMIS 구축현황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2 AM 페이지 43

세계 빈곤퇴치와 한국의 역할 : "한국적 제3의 길" 국회토론회*

Ⅰ. 대외원조 환경변화

■ MDG선언을 통한 빈곤완화 달성노력 가속화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공여국들은 빈곤완화, 교육, 여성권리 향상, 환경, 보건 등의 범지구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결실로 2000년 UN 총회에서 "천년개발목표"(MDG)를 선언

> *현재 개별 국가들은 MDG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여 부처별 예산배정과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서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함

■ ODA규모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중

- 05.9월, 제60차 UN정상회의에서 MDGs를 포함한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별 전략 채택 및 실행 결의

※ 2005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 잠정치는 1,065억불로 GNI대비 0.33% → 2000년 0.22% 대비 0.11% 증가

■ ODA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개선 요구

- ODA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점진적 · 단계적 언타이드화, 최빈국 지원강화, MDGs 달성 등 원조의 국제화 요구 증대

※ OECD/DAC는 2005년 2월 파리 고위급 포럼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을 채택,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5개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개발결과관리, 상호책임성 12개 지표를 개발,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설정함

■ MDG달성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

- 우리정부는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

* 본고는 신장범 KOICA 총재의 "한국적 제3의 길" 국회토론회(2006.7.13) 발표 자료임

합대책"을 수립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 ('06. 1)

-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효율성 제고, 국민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 수립

II.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방향

1. 사업목표

■ 국제사회와 함께 MDGs 달성 등 세계적 이슈 해결 적극동참

- OECD/DAC회원국들은 MDG에 기초한 빈곤완화를 ODA 기본목표로 재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조직 개편 실시

■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해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 집중지원

- ODA의 기본목적은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발전이며, 이를 통한 빈곤퇴치 달성

■ 우리나라 위상제고 및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 ODA는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만드는 국가적 비즈니스이며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마련

2. 중점사업 추진방향

■ 개도국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 개발경험 공유 가능 사업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 및 정부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중점지원

  ※ 선진국·개도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분야 지원 강화 및 해외봉사단파견, NGO 지원, 홍보 등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의 확대

■ MDGs 등 국제사회 공동목표 지원강화

- 빈곤완화, 기초보건, 초등교육 등 인간기본욕구(BHN: Basic Human Needs)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여성, 환경 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강화(도표1. 참조)

■ 국제적 재난복구 및 재건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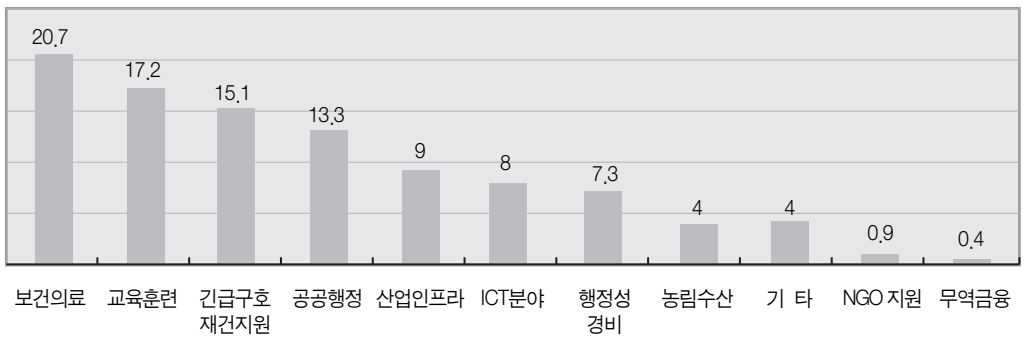
- 이라크·아프간 정부의 조기안정을 중점지원하며, 남아시아지역 일대 등 복구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실시

3. 국별·지역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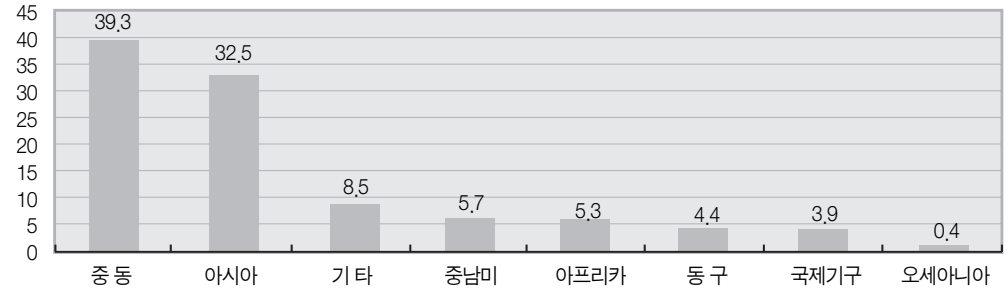
■ 국별·지역별 최적배분 모색

- 국별 특성, 양국관계, 협력효과 등을 감안, 중점지원국가를 선정하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규모내에서 적절히 배분 (도표2. 참조)

〈도표 1〉 2005년도 분야별 지원내역 (%)



〈도표 2〉 2005년도 지역별 지원내역(%)



■ 아시아지역 중점협력기조 유지

–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 지리적 · 문화적 관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정하며, 특히 아세안 및 아세안 후발개도국인 CLMV* 지원강화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아프리카지역

– 사하라 이남을 중심으로 BHN 충족 및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항공연대기금"도입을 결정하고 동 기금의 시행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지정하였음.

■ 중남미지역

–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등 중점협력대상국은 보건, 교육 위주의 시설 및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은 HRD 위주로 지원함.

■ 중앙아시아지역

- 중앙아시아 지역은 시장경제 전환노력 중점 지원

■ 최빈국 지원비율 확대

- 빈곤감소 등 MDGs 달성을 목표로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 우리나라의 GNI 대비 최빈국 지원비율은 0.01%로 DAC 회원국의 1/8 수준

III. 한국의 개발협력(무상원조)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평가

■ 우리의 국제개발협력(무상원조)사업은 대 · 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국제적 재난에 대한 재건복구 지원 노력 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원대상 국가 수의 과다 및 국별 중점지원 분야 선정미흡 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중심의 사업수행에는 한계가 있었음.

■ 사업수단별 투입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성과 중심적 사업체계가 미비함으로 개도국 국가개발계획과의 조화 등 좀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원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ODA 규모 증가로 인해 분야별 집중지원 강화(Sector Programe Approach) 등 원조체제 개선 필요
- 중점협력국 대상 Country Program 수립 및 프로그램형 사업수행체제 개편 필요

■ 이에 따라, KOICA는 2005년 12월 '2006-2009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별 · 분야별 집행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무상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함.

2. 문제점

■ 대외원조규모 미흡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ODA 규모로 확대 필요(2005년도 OECD/DAC 회원국 ODA/GNI 평균 0.33% - 우리나라 0.09%)
- 2005년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총액 기준 전년대비 75.7%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기인 (2004년 0.06%)

■ 무상원조 비중 저조

- OECD/DAC 회원국 평균 무상비율은 전체원조의 90%를 상회하며,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공여국들은 100% 무상원조 실시

※ 우리나라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상정된 2009년도 무상비율은 45% 수준

■ 투입위주의 원조사업 수행

- 사업수단별 투입위주의 사업으로 성과위주의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장기 전략 부재로 전략적인 원조목표 수립과 수원국 맞춤형 사업수행이 미흡

■ 국별원조정책 미비

- 사업중심 원조로 수원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원조계획수립이 불가하며, 국별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업수단간 연계도 미흡

■ 소액 다국가 지원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저하

- 2005년도 지원 국가 수는 138개국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
- 2005년도 지원 상위 10개국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70% 차지, 이를 제외한 30%의 재원을 128개국에 분산 지원

■ 본부위주의 업무체제로 현지실정 반영 미흡

- 일괄적 수요조사에 따른 수원국의 개발수요 반영이 미흡한 바, 사업수행 현장의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의 역할강화 필요

■ 무상원조사업 수행주체 분산으로 사업효율성 저하

- 정부의 무상협력사업 정책일관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사업수행주체 분산으로 우리나라 원조정책 인식혼란 야기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 중 타부처 비중은 약17% 차지

IV. 한국의 무상원조에 대한 개선현황

1.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

가. 전략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 중기무상원조정책 및 국가별원조정책 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한국형 원조모델을 발전
- 국민참여형 원조를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체제 구축
- 사업수행 역량강화 및 평가 체제 그리고 직원의 역량강화

나. 소액다국가 지원방식 개선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실현

- 협력대상국을 127개국에서 58개국으로 대폭 축소

2. 무상원조사업 수행체계 개선

가. 중점 및 일반협력국에 전략적 집중지원

■ 개발원조 성과제고와 재원배분 효율성을 고려, 선별 지원

- 중점협력국(18국)과 일반협력국(40국)으로 구분

※ 협력대상국 선정 고려요인 :

①수원국 빈곤상황, ②수원국 통치상황(Governance), ③우리나라와의 외교적 관계, ④경제개발 잠재력, ⑤우리나라와의 경협관계 등

나. 국가별 원조정책 (Country Program/ CP) 수립

■ 전략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개발원조 실현을 위해 개도국별 지원계획 수립

- 수원국 빈곤감소전략서(PRSP), 천년개발목표(MDGs)와 원조방향을 일치시켜 수원국 경제개발계획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다. 중점 지원분야 선정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를 선정

※ KOICA 중점지원 분야 결정

①교육(Education), ②보건의료(Health), ③행정제도(Governance), ④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⑤정보통신(ICT), ⑥산업에너지(Industry & Energy), ⑦환경 및 기타(Environmental & Others)

라. 정책대화 강화

■ 국별 원조정책과 수원국의 개발계획과의 조화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 공관과 수원국간의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정책대화를 활성화하여 수원국과의 원조조율 및 정책일관성 유지

3. 사업수행방식 개선

■ 국제원조 패턴을 고려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원조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을 프로그램 체제로 전환

- 지원규모가 적고, Sector별 Approach 기반이 미조성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무상원조규모가 증가하므로 Sector wide Approach 기반 마련 등 미래지향적 체계로 체질개선 필요

■ 목표중심적, 종합개발형 원조체제 구축

- 국별 원조정책과 정책대화를 강화하여 원조의 질적 제고 달성

※ 각 국별 지원전략 범위 내에서 개발목표 설정 후, 목표에 합당한 중점지원분야를 선별해서 세부적인 이슈를 정하고, 동 개

발이슈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단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 달성

■ 개발원조와 개도국 국가개발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 개도국 빈곤감소전략, 천년개발목표 등 국가개발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개도국과 함께 이를 달성하는 체제로 전환

※ 예) 과거에는 병원건립이 사업목표였으나, 앞으로는 유아사망율감소, AIDS 예방 등이 사업목표가 되고 병원건립은 수단의 일부가 됨.

4. KOICA 조직의 선진화

■ 국가와 분야에 집중한 조직개편 실시

- "프로그램방식 원조체제" 및 "우리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국가와 분야집중을 강조한 전략적인 사업수행체제 구축

■ 지역정책기능 강화

- 현 지역정책팀을 지역정책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장기 원조정책 수립, 협력대상국 선정 및 지원분야 선정, 국별 원조전략(CP)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

■ 중점지원분야에 입각한 사업수행 편제

- 국제협력단의 중점지원 8개 분야 반영

※ 교육훈련팀, 행정제도팀, 보건의료팀, 글로벌이슈팀, 정보통신팀, 산업에너지팀, 농촌개발팀, 재난복구팀

■ 「전략수립, 사업수행, 평가」의 유기적인 균형 유지

- 지역부서, 사업부서, 평가부서간의 효과적인 조율을 위해 임원의 관장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 평가업무의 강화차원에서 사업평가팀을 '사업평가실'로 격상

■ 행정 및 지원부서 슬림화

- 원조기획 및 사업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부 · 기획부를 '기획관리부'로 통합

5. 해외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 선진형 재난구호체계로 전환

- 과거 현금지원 위주의 재난구호에서 긴급구호대파견, 긴급물자 수송 등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선진원조형태로 전환
-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위해 법적 · 예산적 장치 마련 중

※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안)' 국회 심의중

※ '07년부터 해외재난 긴급구호예산을 현 300만불 규모에서 1,000만불 규모로 증액 검토 중

■ KOICA 긴급구호대 결성

- 항시 파견체계 구축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재난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 파견절차 및 행동요령 등 필요한 매뉴얼 작성
- 구호대 모의훈련 등 실시 고려

〈 긴급구호대 구성 〉

* 긴급구조반 : 소방방재청(중앙119구조대)
* 의료지원반 :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긴급구호 봉사단 : 민간단체

☞ '06. 5월 인니 족자카르타 지진발생후 22시간만에 KOICA 구호대 및 의약품을 현장에 파견 (해외구호대로서는 최단시간내 지원한 국가 중 하나)

■ 긴급구호 후 재건복구사업 후속지원

- 필요시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사회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재건 및 역량강화 중점지원

V. 결론과 제언 : 향후 정책과제

1. 무상원조 중심의 ODA 규모 확대

■ 현재 우리의 ODA규모는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미흡한 수준

- 2005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7.4억불로 GNI 대비 0.09% 차지.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국제기구 출자 · 출연에 기인(2억불)
- 동 출연금 제외 시 ODA/GNI 비율은 0.07% 수준으로 2005년도 OECD/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평균 0.33%의 1/4 수준에 불과

■ 무상원조 비중 확대

- 선진국은 개도국 빈곤퇴치 및 사회 · 경제개발 지원이라는 ODA 취지에 부합하는 무상원조 위주로 ODA를 제공
- OECD/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제구축이 필요하며, 무상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0%수준으로 조정 필요

※ DAC 권고사항 : ODA 양허율 86%, 언타이드화, 최빈국에 무상원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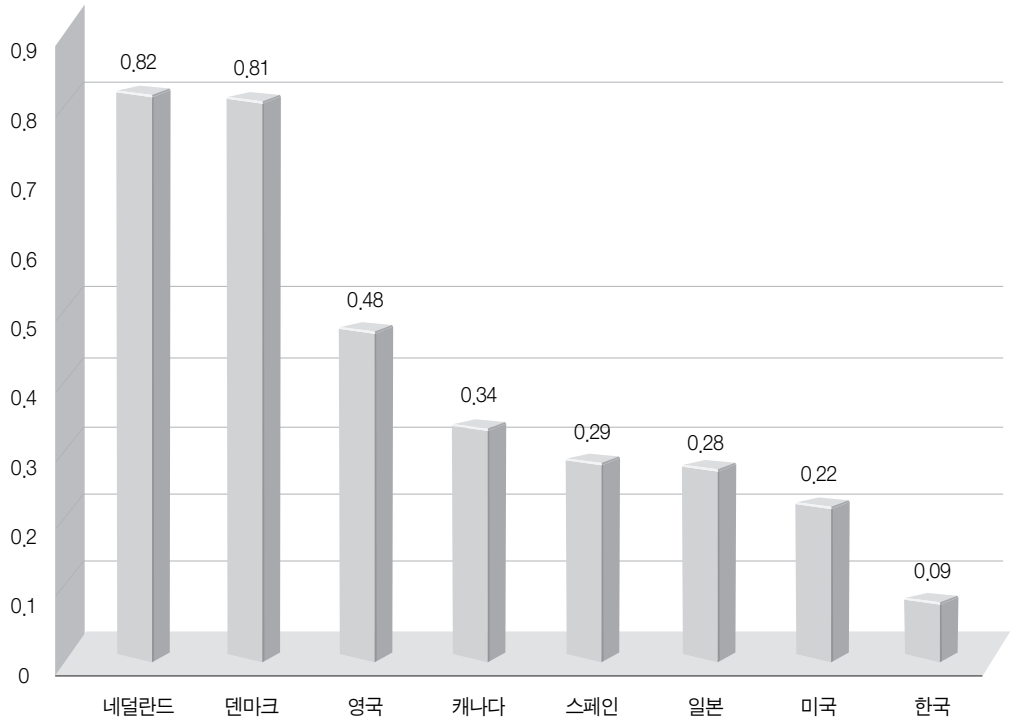
2. ODA 무상원조사업 실시부처 일원화

■ 현재 여러 부처가 중복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을 KOICA로 일원화 필요

- KOICA의 설립목적이 무상원조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 중 타 부처 비중은 약 17% 차지함
(현재 정통부 등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시행 중)

〈도표 3〉 2005년도 ODA / GNI 비율 (%)



• 정통부 : 인터넷봉사단파견
IT연수생초청사업 실시
• 복지부 : 보건의료지원사업 실시
• 문광부 : 문화봉사단파견사업 실시

■ 타 OECD회원국과 같이 무상원조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미국 USAID, 일본 JICA, 캐나다 CIDA, 스페인 AECI 등)

– ODA는 개도국과 선진국 부처간 교류가 아닌, 개발원조라는 국제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각 국가들은 공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 수행

3.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 우리나라는 OECD 공여국 중 유일하게 빈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인 점을 감안, 우리만의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빈곤퇴치국(Poverty Cutter)' 이라는 국제적 명성을 획득

※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된 원조기법을 연구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분야별 원조상품 개발)하고,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발전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한국형 정책 프로그램 제시

4. 대외무상원조사업의 효율성제고

■ 우리의 대외공적원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중장기적 무상원조정책을 발전시켜 원조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 대외무상원조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 배가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여타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원조방식을 발전시켜 무상원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

■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각 사업별 상호 연계 및 분야별 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국가별 · 분야별 원조전략도 개발

■ ODA규모의 확대에 부응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혁신 노력과 함께 ODA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노력 강화

5. 평가시스템 강화

■ 성과관리 자율평가 정착

-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중간, 종료평가 실시
- 국별, 주제별, 이슈별 평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 수행

■ 평가체제 재구축 및 피드백 강화

- 평가규정 제정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피드백 강화

■ 평가의 신뢰성 확보

- 평가수행 시 NGO 등 민간참여 강화

■ 평가결과의 공개 확대

-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결과 적시공개
-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

6.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 ODA사업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민간기업, NGO, 대학 등 시민단체(Civil Society)들의 참여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효과적인 ODA 사업수행 가능

※ 쓰나미사태 발생 시 우리 국민, 민간단체, 지자체 등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필요 물품 및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했으며 국민들에게 ODA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

2005년도 OECD / DAC 회원국 ODA 지원현황

(단위 : 억불, %)

국 가 명	GNI	ODA총액(A)	ODA/GNI 비율
호 주	6,787	16.7	0.25
오스트리아	3,007	15.5	0.52
벨 기 에	3,735	19.8	0.53
캐 나 다	11,094	37.3	0.34
덴 마 크	2,602	21.1	0.81
핀 란 드	1,894	9.0	0.47
프 랑 스	21,235	100.6	0.47
독 일	27,948	99.2	0.35
그 리 스	2,240	5.4	0.24
아일랜드	1,688	6.9	0.41
이탈리아	17,557	50.5	0.29
일 본	46,750	131.0	0.28
룩셈부르크	304	2.7	0.87
네덜란드	6,247	51.3	0.82
뉴질랜드	1,011	2.7	0.27
노르웨이	2,971	27.8	0.93
포르투갈	1,778	3.7	0.21
스 페 인	10,865	31.2	0.29
스 웨 덴	3,568	32.8	0.92
스 위 스	3,992	17.7	0.44
영 국	22,462	107.5	0.48
미 국	125,000	274.6	0.22
합 계	324,731	1,064.8	0.33
한 국	7,868	7.4	0.09

자료: '06.4.4. OECD / DAC 발표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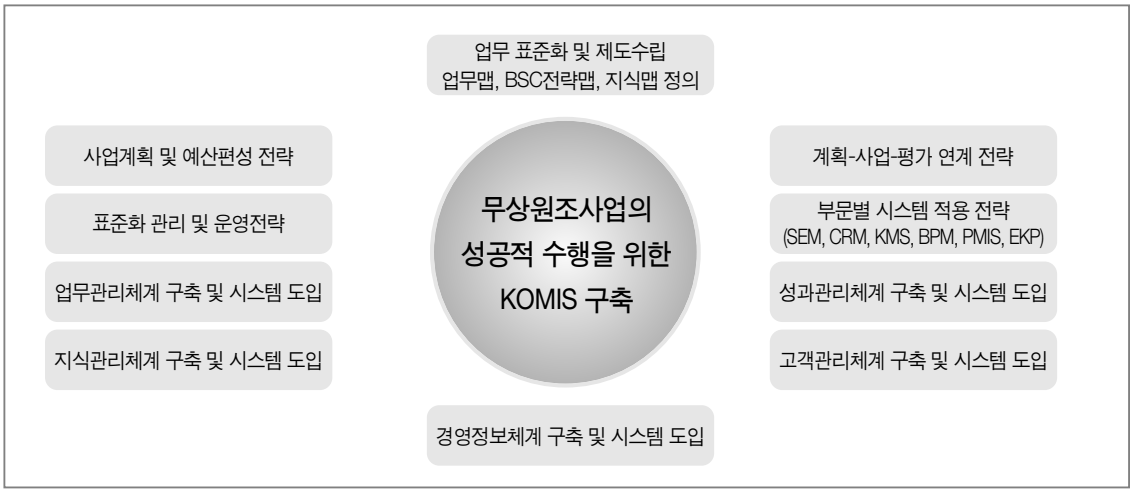
KOMIS 구축현황

1. 추진배경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원조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 통합시스템(KOMIS: KOICA Management InformationSystem) 원조업무의 시스템적인 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기관' 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원조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지식경영체계를 도입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기반 위에 업무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체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추진방향



3. 통합원조관리시스템(KOMIS) 사업내용

가. 전략경영체계

■ 프로세서 재설계(BPR/PI), 지식관리(KMS), 성과관리(BSC) 등 KOICA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컨설팅

나. 전략경영시스템 구축

■ 경영전략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관리, 재무회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다.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 KMS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패키지 S/W 적용구현, 전송방식 등 기존 그룹웨어 보완

■ SSO를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거친 전사포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라.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개발조사, 연수, 물자지원, 전문인력, 민간협력 등 KOICA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마. 고객서비스시스템 구축

■ 내외부 고객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분 야	구 분	주 요 내 용
전략경영체계	컨설팅	BPR/PI 수행(종합컨설팅)
	SOP	프로세스자산화 및 업무전자매뉴얼 시스템
전략경영시스템	시스템	경영전략계획 및 예산시스템 구축 재무회계시스템 구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BSC)
지식정보시스템	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KMS) 그룹웨어시스템 개선(GW) 전사포탈시스템 구축(EP)
사업관리시스템	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구축 (PMIS : 프로젝트/개발조사, 연수, 물자지원, 전문인력, 민간협력) 업무프로세스관리시스템 구축(BPM) 통계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시스템	시스템	고객서비스시스템 구축

* BPR/PI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Process Innovation
* 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BSC : Balanced Score Card
* EP : Enterprise Portal
* SSO : Single Sign On(단일사용자인증)
* 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표준업무매뉴얼)
* BPM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4. KOMIS 시스템 구성

가. 전략경영부문

■ 금년 5월에 구축되어 현업적용을 추진중인 신인사관리시스템(e-HR)을 포함하여 경영전략계획(사업계획), 예산, 재무회계 및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됨

나. 업무지원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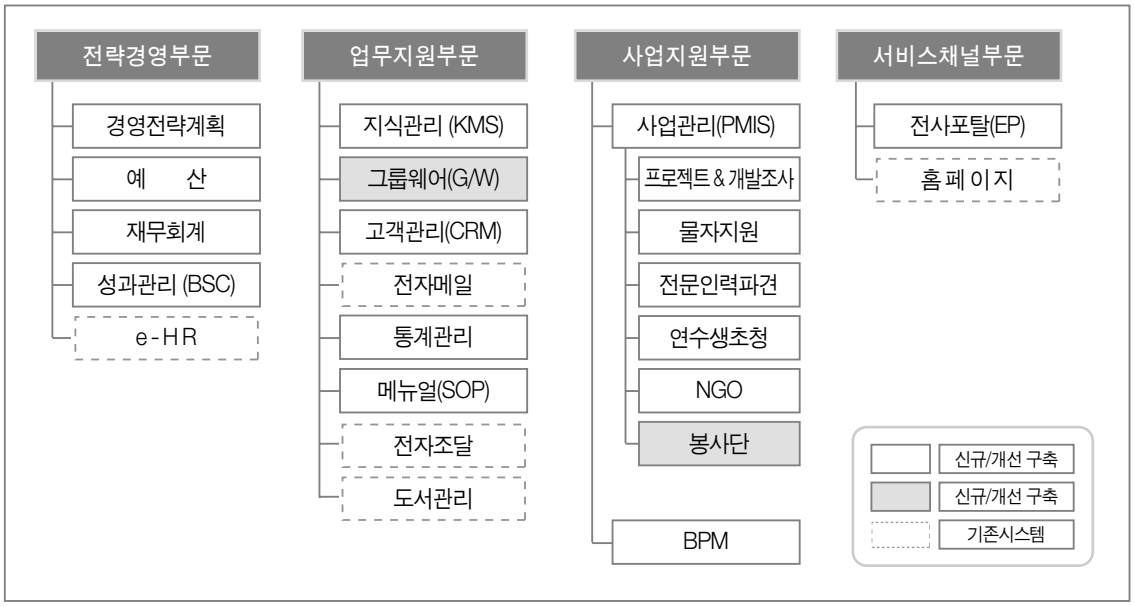
■ 기존시스템인 그룹웨어, 도서관리 등을 포함하고 전사적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제반 실적의 총괄 및 자동취합을 위한 통계관리시스템, 업무전자매뉴얼시스템 등이 있음

다. 사업지원부문

■ 프로젝트/개발조사 등 KOICA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시스템이 BPM 기반으로 구성됨

라. 서비스채널부문

■ 홈페이지와 전사포탈시스템이 있음



5.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06. 1월~ 07. 3월(15개월)

나. 개발자 : (주) 대우정보시스템

다. 진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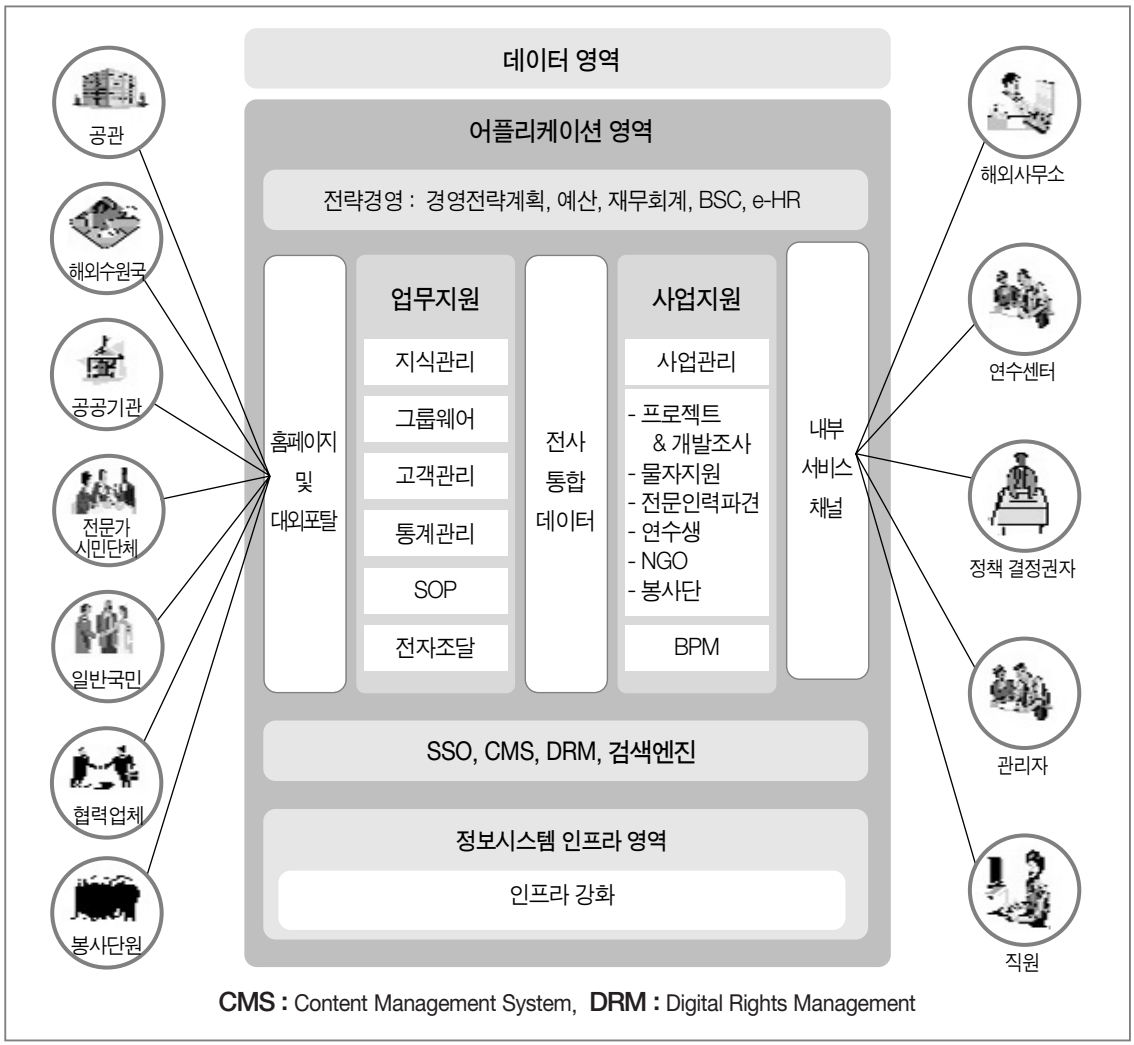
■ 06. 6월 종합 컨설팅

■ 06. 11월 KMS, CRM, BSC 1차 시범운영

■ 07. 2월 재무회계, 사업관리, BPM 2차 시범운영

6. KOMIS의 향후 이미지

지식기반의 선진원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OMIS는 KOICA의 비전 및 사업전략방향에 따른 자원계획 및 배분, 사업실행, 성과평가, Feedback 등 전략중심의 경영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다. 수작업 제거, 업무개선, 업무간 연계성 및 통합성 제고 등을 통해 업무효율화 및 경영혁신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축 후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인의 변화에서 조직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했다. 임직원 여러분들이 동시스템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의지가 동 통합원조시스템 구축사업의 궁극적인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7. 혁신용어 해제

가. BSC (Balanced Soore Cards : 균형성과지표) 조직성과관리제도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바꾸어주는 전략관리,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1992년 컨설팅 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공동 개발했다.

대부분의 기억이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이나 수익 등의 재무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수익 등의 재무적 지표만으로 기업의 장기적 성과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재무적 지표는 경영전략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과거의 정보이며 사후적 결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기 힘들었다.

반면, BSC는 재무적인 측면(매출액, 순익 등)에 의존한 기업성과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표로서 학습(직원 역량, 정보시스템 능력), 내부프로세스(혁신, 운영), 고객(고객만족도, 신규고객창출), 핵심성과(매출액, 순익)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잡힌 성과 측정기료표' 이다.

현재, KOMIS 구축 컨설팅팀은 BSC 기법을 통해 KOICA 중기 목표(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 달성을 위해 핵심이슈 및 동 이슈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전통적인 BSC 기법에 의하는 학습, 내부프로세스, 고객, 핵심성과 관점에서가 아닌 무상원조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자원, 활동, 집행성과, 성과품질의 관점에서 상기의 핵심인슈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나.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지식관리시스템)

조직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인적 자원이 소유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인 지적자산을 조직에 축적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생산, 저장, 검색, 인센티브 부여 등의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에도 KOICA는 그룹웨어를 통해 전자결재, 게시, 통계, smart를 연계함으로써 정보의 공유와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통해 지식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의 축적,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 정보검색, 유무형의 개인 지식의 활용, 지식생산활동의 지원체계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식관리활동이 아직은 미흡함.

이에 KOICA는 상기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KMS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차원 멀티맵(다차원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정보를 저장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보저장방법), 지식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지식카페 등 다양한 지식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리)

기업이 고객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자료를 정리, 분석해 마케팅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실현, 수정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기법을 의미한다.

CRM은 단순히 제품을 팔기 보다는 '고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인가',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둔다. 이런 고객성향이나 취향을 먼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한다.

KOICA는 다양한 고객을 갖고 있다. 수원국(정부관료, 언론, 원조수혜자 등), 선진원조기관들 등의 해외, 일반국민, 정부관료, 국회의원, 언론, NGO, 협력업체, 민간업체, 청소년, 대학생 등의 국내로 구성된 고객을 갖고 있다. 이런 다양한 고객층을 감안한 CRM 체계구축을 위해 KOMIS 컨설팅 팀은 단체메일링, 뉴스레터 발송, 고객인적정보 관리, CRM 성과분석툴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CRM 제도 구축을 위해 고객관리 TFT를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7월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라.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1990 년대 초 미국에서 제창한 개념으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의 측면에 있어, 작업을 개선하고 자원의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BPR은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재고(再考)가 수반되며, 원가, 서비스품질, 직원들의 활력 등과 같은 중대한 지표들이나 또는 그 모두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활동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BPR 의 제안자 해머(Hammer)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구축 활동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 부문에서 비용, 품질, 서비스, 스피드와 같은 요인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비즈니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극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KOICA는 BPR 개념하에 조직발전 및 성과관리를 위해 종합컨설팅을 대우정보시스템 경영컨설팅팀에 의해 수행중이며 동 결과는 향후 개발될 BSC, KMS, EP, CRM 등의 근간이 될 것이다.

마. EP (Enterprise Portal) : 전사포탈시스템

EP(Enterprise Portal)는 경영자, 종업원, 공급사, 파트너, 고객 등이 유무선 방식의 Web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글 사인 온(SSO)방식으로 기업내의 정보와 가치사슬 내의 프로세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시스템이다.

EP와 비슷한 개념의 포털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포털(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비즈니스 포털 (Business Portal), 코포레이트 포털 (Corporate Portal) 등이 있다. 엔터프라이즈 날리지 포털 (Enterprise Knowledge Portal), 워크스페이스 포털 (Workspace Portal) 등은 특정 기능과 목적이 강화된 EP 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동 시스템 구현을 통해 BSC, eHR, KMS, Homepage,

바.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업무매뉴얼

각 업무별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순서 및 업무 방식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며 이를 BPM상에 구현하여 별도의 업무매뉴얼 발간, 업무인수인계 등의 활동 없이도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매뉴얼을 말한다.

사.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 업무관리시스템

KOICA의 주요 업무절차를 표주환 및 가시화하여 신입직원 등 업무초보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업무매뉴얼(SOP)을 활용, 업무생산성을 높이고 업무품질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리자가 주요 업무처리 현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을 제공.

Ⅲ. 개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 제 57차 OECD/DAC(개발원조위원회)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보고
-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결과 및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제1차 한-UNDP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대NEPAD 지원추진(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 2006년 UNCTAD 최빈개도국 보고서
- APEC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각료회의
- 2006 ECOSOC 실질회의(9) - 인도지원분야

2. 공여국

-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1)
-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2)
- 제2차 한-영 ODA 정책협의 결과
- 영국정부 개발원조 백서 발간
-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회의(CGI) 개최
- 2006년 베트남 중간연도 원조공여국회의 개최 결과 보고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63

제57차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보고

표제 회의가 6.6-7간 파리에서 Fritz Meijndert 의장(네덜란드 외교부)주재로 개최되어 ODA 통계 세분화 작업, 원조확대 계획조사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Ⅰ. 핵심 요지

■ 미국, 일본 등 대부분 회원국들은 각국 예산체계 및 원조기관의 재조정 등 국내적인 사유로 향후 2-3년간의 ODA 확대 계획(scaling up) 및 지역별 배분계획을 표명하기 어려움을 밝힘. 그러나 장기적 차원의 ODA 확대 계획 수립이 원조자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원국 ownership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 우리 정부가 작년에 2007-9년간 총 200만불 출연을 제안했던 "APEC 지원기금(APEC support fund)"이 DAC의 다자간 ODA로 계상되는 다자간 기관으로 승인됨.

■ 개발원조 통계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개발원조 통계 수치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AC통계(집계 통계)와 최근 이용도가 높아지는 CRS통계(건별 통계)를 통합한 보고양식인 "CRS++"을 마련했으며, 2005년도 ODA 실적 보고시부터 이를 적용가능한 회원국들부터 실시하기로 함.

■ 최근 일련의 부채탕감, 공여국내 난민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현행 ODA 지원이 실질적인 빈곤감축 효과가 없다는 일부 국제 NGO들의 비판에 대해 ODA가 포함하는 범위와 계산방식에 대한 투명성 증진과 ODA에 대한 대NGO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증진 노력을 강화키로 함.

■ 기존에 긴급 원조 및 재건(emergency assistance and reconstruction)이라는 명목의 지원을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으로 개명하고 긴급원조(emergency response), 재건지원(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재난예방 등의 하부항목으로 코드를 신설 혹은 재분류함.

- 아울러 인도적 지원과 분야별 지원(sector-allocable aid)을 명확히 구분키로 하였으며, 해당 재난에 대한 UN 보고가 6개월 이상 없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별 지원으로 계상키로 함.

Ⅱ. 관찰 및 건의

■ 우리 나라가 향후 DAC에 가입할 경우 DAC회원국의 주요 의무사항인 DAC통계 보고이외에 원조사업 건별 통계인 CRS 통계 보고도 해야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계 보고 시스템이 세분화된 DAC 통계 작업 보고 체계에 맞게끔 국내 관련 기관간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회원국 내부에서도 기술 협력(TC) 등 DAC 통계 기준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제한된 통계 자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우리나라는 DAC 비회원국으로 집계 통계인 DAC통계만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 DAC 회원국 가입시 원조 건별 동계인 CRS통계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바 두 통계의 통합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건별통계 보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파리선언 및 MDG 선언 등에 대한 서명국으로서 이에 대한 이행결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및 통계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원조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별/섹터별 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국제 NGO들이 개발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혁신적 ODA 재원조달 및 ODA 확대에 대한 국내 일부 부정적 여론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ODA 인식 제고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 국제적으로 ODA 통계 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우리나라도 향후 DAC 가입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계보고 부문과 원조정책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바, 작업반 회의 및 관련 워크샵 참석 등을 통해 통계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통계 작업반은 "ODA eligible" 국제기구를 사실상 승인하고 국별 ODA의 최종 DAC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Ⅲ. 주요 내용

1. 2005년 통계보고 성과 검토

■ 2005년도 확정통계의 예정 보고시기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9월말을 전후하여 보고할 것임을 밝혔음.

-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등은 7월 중 보고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비회원국이지만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해 9월 이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원조건별통계(CRS통계)와 집계통계(DAC통계)의 통합 진행상황 보고(CRS++통합보고양식)

■ 오스트리아는 2004년도 원조실적에 대한 통합보고양식 테스트 결과 건별통계 보고를 통해 집계통계가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보고함. 스웨덴, 핀란드 등은 내부 시스템을 수정 중이며 2006년 실적부터는 통합보고양식 형태로 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함.

3. 회원국별 향후 원조확대계획 조사 (Scaling-up Survey)

■ 파리선언 이행 등과 관련 회원국들의 2007-8년도 ODA지원 확대 계획 및 지역별 배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15개국이 답변을 보냈으나 이중 9개국만이 지역적 배분을 보고함.

■ 대부분 국가들은 예산체계 및 국내 사정으로 ODA 규모 및 지역별 배분계획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힘. 그러나 향후 원조규모 확대계획에 대한 조사가 원조자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원국 오너십을 강화시키는데에 필수적임을 공감함.

4. 공여국내 원조정보 조사결과 검토 및 민간자본(Private Flows)보고

■ 사무국은 2005년 작업반 회의에서 원조관련 정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여국들 내부 시스템의 정보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제안한 바 있음.

- 네덜란드 외부무, EC와 영국 DFID의 리뷰를 통해 원조성과분석양식(result template)을 제안함

※ 동 성과양식은 시트별로 한 국가와 한 공여국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요 MDG 지표, 원조자원개황표, 중기 성과자료, 해당 공여국의 파리선언 지표를 이용한 원조효과성 성과, 그리고 파트너국가의 섹터별 예산 및 양자/다자간 ODA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오스트리아는 파리선언 지표 내의 기술협력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하여 통계 자료간의 비교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해당 지표들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보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우려를 표명함. 벨기에는 이 같은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공여국이 제공한 원조자금을 수원국이 오너십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통계가 필요한 것임을 지적함.

■ 의장은 원조성과에 대한 보고를 통계부문에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원조효과 작업반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측정의 기준선(baseline)을 정립해 나가기로 함.

■ 사무국은 ODA 통계는 수원국의 보고가 아닌 공여국의 보고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원조조화를 위해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책대화 시에 공여국 각기의 다른 방식이 아닌 단일화 된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설명함.

■ 민간자본(private flows)관련 벨기에는 부동산과 재투자소득 항목을 삭제하고, 다자간 민간자본 하위 2개 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일본은 항삭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독일과 네덜란드는 벨기에의 제안에 찬성하였음. 사무국은 DAC 테이블1의 민간자본 하위 4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서면 결의에 부치기로 함.

■ 민간자본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해외송금 흐름이 논의 된 바 미국은 민간자본 보고 확대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사무국은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민간자본 자료 활용에 대해 제안하기로 함.

5. 기술협력(TC)의 세분화

■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5월 16-17일 워크샵을 통해 원조타입에 대한 구분 안으로 프로젝트/프로그램, 예산지원 및 기타현금이전, 인적교류협력(Exchange schemes), 소규모지식공유, 기타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이는 6.14 GOVNET과 6.28 DAC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사무국은 3/4분기 중 원조타입 구분 안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기로 함. 단, 9월 이전에 기술협력 세분화 사업에 대한 공여국의 예산지원 확정이 있어야 함.

■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제안된 구분 안에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일본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함을 언급함. 독일은 항목의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2005년도 통계 보고시에 가술협력 세분화 워크샵의 결과를 참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술협력 세분화의 우선적 목적은 원조 실적의 분석에 있음을 설명함.

6. 공여국내 난민지원 보고

■ 회원국들은 네덜란드의 제안대로 공여국내 난민지원 목적코드를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기타부문 하위로 옮기는 것에 찬성함.

- 또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난민의 자발적인 재정착비용 만을 ODA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함. 나아가, 의장은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DAC에 서면 제안하기로 함.

7. 부채탕감 보고

■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 확정으로 인해 일부 공여국들의 2005년 ODA 지원 실적이 크게 증대된 것과 관련, 네덜란드는 NGO측으로부터 부채탕감, 공여국내 난민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현행 ODA 통계가 실질적인 빈곤감축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보고함.

■ 이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들도 ODA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ODA통계의 일관성, 지속성, 투명성 유지를 강조함.

- EC는 NGO측 비판의 본질은 투명성 제고에 있지 않으므로 정치적인 접근이 더 적절할 것임을 언급함.

■ 의장은 DAC에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차원에서 부채탕감 보고의 한계점과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대되는 DAC의 역할을 전달하기로 함.

8. ODA 적격 국제기구 리스트 (DAC 지침 Annex2) 업데이트

■ ODA 적격 국제기구가 아래와 같이 추가됨.

- IMF 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APEC-ASF)
  (대테러리즘 제외)
-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GICHD)
-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AWEPA)
-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 War-Torn Societies International(WSP International)

■ 사무국은 앞으로 국제기구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 추가 안을 2개국 이상만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음.

9. DAC 통계작성지침 업데이트

■ 동건관련 프랑스만 국제기구리스트인 Annex2에 대한 변경사항 승인을 작업반이 아닌 DAC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한 조정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확정안 반영 후 9월 DAC 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키로 함.

10. 예산지원 및 섹터지원(섹터프로그램) 보고

■ 사무국은 예산지원 및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지침 상의 정의를 회원국 각국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섹터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는지 조사함.

■ 회원국들은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와 해석으로 인해 통계보고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공감하였고 덴마크는 관심있는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작업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덴마크, 오스트리아, EC,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6월 말 이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11. 분쟁, 평화, 치안 섹터 보고 경험 리뷰

■ 사무국은 ODA 계상 분야로 신설되었던 분쟁, 평화 및 치안 부분에 대한 보고 실적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1,400백만불에 이르렀음을 보고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분류기준 설명을 참조하여 과거 보고 중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 네덜란드는 CPDC와 협력하여 사례모음집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관련 사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12. 인도적지원 정의 및 원조목적코드 개정

■ 인도적 원조의 정확한 통계생성을 위해 UN OCHA,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DAC 등의 기존 논의를 종합한 정의를 마련하고 일반 분야별 지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함.

■ 원조목적 코드 상에 인도적지원 700코드를 신설하고 그 하위에 720 긴급원조(Emergency Response), 730 재건지원(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740 재난방지 및 예방(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으로 그룹화 하고 그 하위에 세부 목적 코드를 재분류 혹은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함.

13. 성평등지표(Gender equality marker) 업데이트

■ 성평등 관련 원조 실적의 명확한 집계를 위해서 정책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성평등지표(Gender marker)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부문 원조 하단에 위치했던 여성개발 목적코드(42010)를 여성평등조직 및 제도(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15151)로 수정하여 정부 및 시민사회부분 하위로 재분류 하기로 함.

14. 복수 목적코드 사용 회원국 경험 발표

■ 영국과 캐나다는 원조사업의 하나의 목적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다 부문에 걸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정확한 섹터지원 현황의 분석을 위해 복수 목적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기 활용 경험에 대해 발표함.

- 복수의 목적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원조자금의 사용현황을 통계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부문에 걸친 cross-cutting 성격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반면, DAC집계통계를 통해 발간되는 자료들과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고 통계 입력 담당자들의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음.

■ 일부 우려도 제기 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바, 적용 방안에 대해 사무국은 더 발전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함.

15. CRS 통계작성지침 업데이트

■ 회원국들은 인도적지원 및 젠더 지표 등의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CRS(건별통계) 작성지침에 대한 개정에 동의하였음. 사무국은 7월까지 회원국들의 서면승인절차를 밟아 9월 DAC회의에 회부할 예정임.

16. HIV/AIDS 관련 보고

■ 호주는 에이즈 관련 원조를 예방(Prevention)과 치료(Treatment)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아일랜드는 지지입장을, 스위스는 새로운 코드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프랑스 및 기타 회원국은 검토에 시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류 입장을 밝힌바, 사무국은 각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17. BSS(기초사회서비스)보고 및 보고서 초안

■ DAC은 UNICEF와 합동으로 기초사회서비스 부문 원조성과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사무국은 기 배부한 국별 기초사회서비스 부문 실적 확인 요청과 관련 회신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 6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함.

18. OECD.STAD 시연

■ 과거 통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OECD.STAD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

19. 2007-8년 DAC 통계작업반 사업계획 및 예산

■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사무국 사업예산 지원계획 발표

■ 사무국은 9월 DAC회의에서 각국이 2007~8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을 표명할 수 있도록 기관 내에서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정책연관성 및 통계 보고의 시의성의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 제공을 바탕으로 Task Force, 회원국 방문, 워크샵 및 회의 등의 활용 계획을 제시하기로 함.

Ⅳ. 참고 사항

■ ODA 차관의 양허성(Concessionality)에 대한 논란이 최근 제기되어 온 것과 관련, 사무국은 고정할인율 10% 수준에서 양허성비율 2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양허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관련 회원국에 요청함.

- 사무국은 2006년 SLM(중간관리자회의)전까지 ODA 차관의 양허성에 대한 정의의 개선을 위해 차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회원국들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할인율과 양허성 비율 문제를 검토키로 함.

■ 내년도 작업반회의는 6.11-12간 개최키로 하고, 통계통합작업(CRS++)관련 워크샵을 12월중 실시하기로 함.

■ 네덜란드의 Fritz Meijndert 의장은 금년 8월 방글라데시 대사 부임으로 금번 회의에서 마지막 의장직을 수행했고, 회의 개최 첫날(6.6) 주 OECD 네덜란드 대사 주최로 환송회가 개최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71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결과 및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6.27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및 6.28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Ⅰ. 핵심요지

1.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6.27) 결과

■ DAC 사무국은 회원국의 향후 3년간의 수원국가별 ODA 지출계획을 조사하고 동 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 실시 배경은 향후 공여국의 ODA 총액이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개별 수원국별로 지원받을 ODA규모를 파악하여 수원국의 빈곤퇴치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배로 늘리겠다(doubling)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아직 구체적인 지출계획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 증가는 2009년 또는 2010년에 이루어질 전망

■ 금번 조사는 DAC 회원국 및 5개 국제기구(WB, EC, UNDP, UNICEF, IMF)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미국, 이태리 등 다수 G7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총 ODA 흐름의 약 27%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 미국은 현재 ODA 개혁작업을 진행중이라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힘.

■ 금번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도 △긴급원조, 난민지원, 부채탕감 등 상당수 ODA 사업은 미래의 배정계획을 미리 수립하기 어렵고, △특정국가에 대한 지출계획 외에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 배정(global allocation)이 있으며, △국내예산규정상 미래의 지출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forward

data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사방법론의 개선을 촉구함.

■ 독일,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미래의 지출계획 파악은 수원국의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공여국간 원조조정 및 원조계획 수립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여국의 행태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지출계획조사 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함.

2.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6.28) 결과

■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협력관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회원국이면서 DAC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는 8개국은 현재 모든 DAC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DAC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동 국가들을 여타 Non-DAC 공여국으로부터 구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우선 동 국가들을 "OECD member DAC observers"라 명명하고, 동 국가에 대한 협력은 outreach라는 용어 대신에 inreach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 국가에 대한 정책협력을 아래와 같이 추진

- 매년 12월 SLM 회의 직전에 DAC 의장과의 비공식대화 개최
- 금년 10.12~13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DAC 회원국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정책대화 개최 (DAC 가입 준비를 위한 사전 정책대화 프로세스, 원조효과 아젠다, 통계 등을 다루기로 합의)

■ 한편, 체크는 DAC 가입 준비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협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국의 ODA에 대한 DAC의 light peer review를 받기를 희망함.

-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 표명. 다만, 소요비용은 체크 정부가 부담

■ 여타 Non-DAC 공여국은 BRIC's, 아랍공여국, Non-OECD EU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을 추진하고 원조효과 개선에 중점을 두며 점진적 협력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3. 관찰 및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아직 DAC 비회원국으로서 금번 향후 3년간의 ODA 지출계획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지만, 우리의 ODA 선진화를 위해 현재의 1년 단위 사업계획 외에 3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Non-DAC 공여국과 DAC 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위한 이스탄불 회의(10.12-13)는 DAC 회원국과 OECD내 DAC 비회원국간에 최초로 개최되는 정책대화임을 감안, 동 회의에 본부대표단의 참석을 건의함.

II. 상세 논의내용

1. 제3차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6.27)

■ DAC 사무국은 회원국의 향후 3년간의 수원국가별 ODA 지출계획,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 다자간 원조 및 양자간 원조간의 배분, 중점지원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동 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간 다수 공여국이 ODA 확대를 공약함에 따라 ODA 총액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개별 수원국별로 지원받을 ODA 규모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수원국의 빈곤퇴치계획 수립이 어렵고, 그만큼 원조효과가 줄어든다는 인식에 따라 원조효과 증진차원에서 추진하였음.

■ 이번 조사결과 파악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상세 DCD /RD (2006)2/RD4 참조)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배로 늘리겠다(doubling)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아직 구체적인 지출계획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 증가는 2009년이나 2010년에 이루어질 전망
- 2004년도에 5억불 이상의 원조를 받았던 상위 16개국 중 탄자니아, 베트남, 파키스탄, 모잠비크, 우간다, 수단, 케냐, 말라위 및 루안다는 향후 3년간 20% 내지 25%의 수원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PNG 및 부르키나파소는 정체상태로 예상되며, 이디오피아와 스리랑카는 각각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 또한, 네팔, 아이티, 동티모르는 20 내지 25%의 감소가 예상됨.
- 과테말라, 모로코, 터키, 엘살바돌, 알제리아, 도미니카공, 쿠바, 소말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튀니지아 11개국은 2008년까지 원조가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국가중 9개국만이(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이디오피아, 수단, 케나, 잠비아, 말라위, 앙골라) 5천만불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과 볼리비아는 공여국들이 선호하는 수원국(donor darlings)으로서 앞으로도 원조규모가 계속 증가할 전망

■ 동 조사작업은 22개 DAC 회원국 및 5개 구제기구(WB, EC, UNDP, UNICEF, IMF)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미국, 이태리 등 다수 G7 국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6개국만이 향후 3년간의 지출계획을 밝힘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음.

- 총 ODA 흐름의 약 27%만 가지고 분석을 실시함.

■ 미국은 현재 국내에서 ODA 개혁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전체 ODA의 4분의1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한 결론은 사실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금번 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지리 등 다수 국가들은 국가별 배분과 global allocation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인도적 지원, 긴급원조, 난민지원, 부채탕감 등 forward data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실제 자국 총 ODA의 약 25%만 커버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조사의 방법론의 개선을 촉구함.

■ 일본은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공여국내 예산관련 규정상 정확한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시험적으로 다년간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함.

■ 그러나, 독일, 캐나다 등 다수국가는 동 작업 결과가 수원국의 빈곤퇴치계획 수립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지원계획수립 및 공여국간 원조조화 추진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당장은 정보제공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공여국의 행태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동 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함.

2. DAC 정기회의(6.28)

가.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협력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회원국이면서 DAC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는 8개국은 현재 모든 DAC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DAC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동 국가들을 여타 Non-DAC 공여국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하기로 함.

■ 우선 동 국가들을 "OECD member DAC observers"라 명명하고, 동 국가에 대한 협력은 outreach라는 용어 대신에 inreach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 국가에 대한 정책협력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매년 12월 SLM 회의 직전에 DAC 의장과의 비공식대화
- 금년 10.12-13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DAC 회원국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동 정책대화에서 아래 이슈를 다루기로 함.
  - DAC 가입 준비를 위한 사전 정책대화 프로세스
  - 원조효과 아젠다
  - 통계와 보고
  - 기술협력
  - 체제전환국 및 신흥경제국가에 대한 원조
  - institution building

■ 첵크는 추후 DAC 가입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협력법 제정을 준비하는 것 외에 자국의 ODA에 대한 DAC의 light peer review를 받기를 희망한 바,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음. 다만, peer

review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7-8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음을 감안, 체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음.

■ 여타 Non-DAC 공여국은 BRIC's, 아랍공여국, Non-OECD EU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을 추진하며 원조효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나. PARIS21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방향

■ PARIS21이 최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PARIS21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그룹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PARIS21의 NSDS(National Strategy on Development Statistics)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PARIS21의 제반 활동 및 사업계획이 적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mandate를 새로이 준비토록 권고
- 따라서 PARIS21 운영그룹은 PARIS21을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키로 하고, 사무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PARIS21의 향후 주요 업무영역을 개발통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advocacy), 전략이행지원, 개도국의 활동 및 공여국 원조활동 조정, 통계 기술지원 등으로 규정.
- PARIS21과 OECD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까지 합의서 준비 및 승인에 관한 일정을 제시

■ DAC는 PARIS21의 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통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개도국내 능력개발, 그간 수립된 전략의 이행 등을 주문하였음.

※ PARIS21(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은 1999년 UN 결의에 따라 개도국에서 개발관련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결정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국 정부, 국제기구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개도국 및 공여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OECD 개발협력국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다. DAC과 시민단체(CSO)와의 관계

■ DAC과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사무국 페이퍼를 검토한 바, 일부 국가들이 시민단체와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대다수 참가자들은 주로 아래와 같이 대체로 유보적 의견들을 제시하였음.

- 시민단체의 참여시 유익한 input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환영하나, 예산 및 행정적 부담 측면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주요 회의 계기에 DAC 의장이 시민단

체와의 개별적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작업반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음.

- 시민단체들이 DAC 본회의에 한번 참가하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시민단체와 민간기업과는 구별해서 대처해야 함.

■ 다만, Bill Gates 재단과 같이 대규모 개발원조재단과의 협조문제는 DAC차원에서 유익하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도국의 의료보건, 농업 등 공통관심사에 대한 합동회의 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라. DAC 산하기구 통폐합

■ DAC의 2007-08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DAC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DAC 산하기구의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국 페이퍼를 중심으로 brainstorming 기회를 가졌음.

■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현 체제에서 약간의 통폐합을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대대적인 통폐합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DAC 본회의에서 Peer Review, 커뮤니케이션,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 정책일관성, 원조 언타잉 등을 직접 다루고, POVNET에서 투자문제를 함께 다루며, 분쟁방지(CPDC)와 취약국가그룹을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음.

■ 다만,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별도의 그룹으로 신설할 것인지 또는 현재와 같이 ad-hoc basis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렸으며, 원조규모 확대 및 원조체제를 별도의 그룹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독일 등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음.

■ 또한 산하기구 회의에 국제기구 및 개도국 대표를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추가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음.

마. 자발적기여금 관리계좌

■ 과거에 회원국이 자발적기여금을 제공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서 및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사무국의 행정적 부담이 너무 많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AC은 그간 자발적 기여금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음.

■ 이에 따라 사무국은 자발적 기여금 관리계좌를 18개로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나, informal group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통폐합을 더욱 강화하여 10개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음.

■ 일본은 informal group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 계좌의 통합은 이해하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예를 들어 non-DAC 공여국과의 대화)을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당초의 합의 사항에 위배됨을 들어 유보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결국 의장은 일부 국가들이 계좌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나마 10개로 하여 여타 모든 국가들이 타협하였음을 설명하고, 일본만이 유일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국 정부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자료: 주오이시디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78

제1차 한-UNDP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06.8.21(월)-22(화)간 제1차 한-UNDP 정책협의회가 국제연합대표부에서 개최되어 공동사업 선정 및 양측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 아 래 -

1. 핵심 내용

■ 지난 4월 체결된 한-UNDP 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에 따라 1차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총 600만불 규모의 4개(아프리카 2개, 아시아 2개) 개도국원조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고 그 중 3개 사업에 대한 Cost-sharing Arrangement에 서명함.

- 금번 협의시 새로운 제안 내용이 포함된 아프리카 지역대상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계획서 접수할 예정

■ 우리측이 제기한 2008년도 집행이사국 진출 관련, UNDP측은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 바, 양측은 우리나라의 2008년도 집행이사국 진출과 함께 현재 개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연간 1백만불)의 자발적 기여금을 증액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아울러 박석범 국제경제국장(현 KOICA 이사)은 UNDP 서울사무소의 성격을 현재의 개도국 주재사무소에서 공여국(선진국) 주재 연락사무소로 성격을 바꾸는(re-profiling) 문제에 대해서도 UNDP측에 검토를 요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UNDP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키로 함.

■ 우리측의 ODA정책수립 및 집행 ·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하여 UNDP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한국측이 UNDP 사무국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상기 관련 Gilbert Houngbo UNDP 사무차장보 겸 아프리카국장은 빈곤감축 및 MDG 달성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발정책수립지원,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사업지원을 위해 우리측 파견관이 UNDP 아프리카국에 근무토록 할 것을 제안함.

2. 주요 논의 사항

가. 공동사업 선정

■ UNDP측이 제시한 사업중 우리측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2개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시작할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아프리카 사업(2개) :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for Regional Integration and Trade Policy Formulation and Negotiation" 및 반부패 관련 사업(추후 사업 계획서 접수 예정)
- 아시아 사업(2개) : "Building Anti-Corruption Capacities for Implementing the MDGs" 및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DGs Monitoring System in Mongolia Project"

■ 상기 선정된 사업중 아프리카 지역 반부패 관련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에 대한 Cost-sharing Arrangement에 서명함.

- UNDP측은 상기 3개 사업에 대해 UNDP측의 재정적 기여 확대를 요청한 우리측 수정제안을 모두 수용함(3개 사업에 대해 UNDP측이 총 110만불을 추가 부담하고, KOICA의 구체적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포함).

■ 상기 선정된 사업 외에 사업 내용이 충실하고 긍정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캄보디아 빈곤감소 관련 사업은 차기 공동협력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합의함.

■ 아울러 우리 정부의 ODA 효율성 증대를 위한 UNDP의 사업 제안 관련,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해 OECD/DAC에 비공식적 절차인 light peer review를 신청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advocacy에 초점을 맞추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함.

나. 집행이사국(Executive Board) 진출

■ 우리측은 2000년말 UNDP 수원국(개도국)의 지위를 졸업한 이후 진출하지 못한 집행이사국에 공여국(선진국)의 입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여국 전환시 한국 UNDP 사무소의 성격 전환 등에 UNDP 측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UNDP Bruce Jenks 사무차장보 겸 재원 및 전략적 파트너쉽 국장은 우리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주한 UNDP 사무소를 공여국 연락사무소로 reprofiling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동 국장은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국 진출을 위해 우리의 지역적 소속을 수원국 위주의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불란서, 영국 등으로 공여국으로 구성된 서유럽 및 기타국가군(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 집행이사국들과 함께 서유럽 및 기타국가군에 소속된 집행이사국 그룹과 모두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함.

  ※ 공여국 그룹 국가의 최소 연간 자발적 기여금은 490만불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00만불 이상의 자발적 기여금을 UNDP에 공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 양측 업무 소개

■ UNDP측은 UNDP의 개발정책 및 개도국 개발지원사업, MDG달성전략 등 업무 전반(아시아 · 아프리카국 업무 소개 포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Result-based Management, 재무관리 · 기금회계 및 보고 절차 등 UNDP 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함(관련 자료 대표단 지참 귀국 예정).

■ 우리측은 국제경제국장이 최근의 ODA정책방향, 항공권 연대기금, 아프리카이니셔티브 등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정진규 경제기구과장과 장현식 KOICA 정책연구실장이 각각 ODA 규모확대, ODA집행체제 효율화 방안, 심사평가능력제고 추진현황 및 상세한 KOICA 사업 활동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함.

3. Ocampo 사무차장 면담

■ 동 정책협의회 후, 우리측 수석대표는 Ocampo UNDESA사무차장을 예방하고 금번 한-UNDP간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인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에 설립 예정인 UN 가버넌스 센터와 관련하여 한국을 9월 중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개도국 지원 노력과 국제개발원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사의를 표명함.

4. 관찰 및 평가

■ 양측은 금번에 처음으로 '한-UNDP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금번 마련된 협력 모멘텀을 살려 내년초부터 추진될 공동사업 집행 · 평가 등 구체적 사업점검 및 개발원조지원 능력제고를 위한 정책협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내년도 정책협의회는 1차년도 사업진행에 대한 중간보고 및 구체사업에 대한 공동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공동협력사업 선정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ODA집행기관인 KOICA가 UNDP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 디자인에 참여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업에 집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KOICA가 구체적인 사업참여방안을 수립하여 본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함.

■ UNDP측은 국제개발원조기구에서 공여국의 지위로 국제원조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모두 OECD/DAC 회원국들인 바,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UNDP 집행이사국 진출과 병행하여 OECD/DAC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동 지적과 관련 향후 UNDP 집행이사국 진출추진과 더불어 OECD/DAC가입 일정을 조속 확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 주국제연합대표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82

대 NEPAD 지원추진 (아프리카개발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김성춘 참사관은 6.2(금) NEPAD 사무국의 L. Macharia 대외개발파트너십담당관을 면담, 표제 건에 대해 파악한 바, 관련사항(Macharia 담당관 언급사항) 아래 보고함.

1. 우리의 대NEPAD 지원추진에 대한 NEPAD 측 입장

■ 한국정부의 '아프리카개발이니셔티브' 와 이에 따른 대NEPAD 지원추진을 크게 환영하며 한국측이 지원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음.

■ NEPAD는 아프리카국가들이 세계화시대에서 아프리카대륙의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아프리카 개발지원은 holistic, integrated, co-ordinated한 접근을 요하는 점을 감안시, NEPAD는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지원에 있어 명실상부한 policy framework인 바, 한국의 대NEPAD 지원추진은 매우 고무적임.

■ 참고로, NEPAD의 목표는 ① 아프리카의 지속발전 조건 확보를 위한 여건 촉진 – 평화와 안보 정착, 민주주의와 good governance(정치, 경제, 기업 부문), 지역 협력 및 통합, 능력개발(capacity-building), ② 정책개혁 및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투자증대 – 농업, 인적자원개발(특히, 보건, 교육, 과학기술 및 기능), 인프라(ICT, 에너지, 교통, 수자원 및 위생), 수출상품의 다양화(특히, 농산물, 공산품, 광물, 관광 등), ③ 자원 가동(mobilization of resources) – 국내 저축 및 투자 증대, 공공예산 관리능력 향상, 아프리카 무역의 세계무역 비중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채탕감 및 ODA 확대를 통한 자본 유입 증대 등임.

2. NEPAD의 여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원동향

가. 수원 종류

■ NEPAD framework을 통한 지원은 수원주체에 따라 NEPAD 사무국에 대한 지원인 Institutional Support와 NEPAD 산하 7개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에 대한 지원인 Programmatic Support로 분류됨. 전자는 사무국의 일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grant)인 Budget Support와 사무국이 관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인 Sectoral Support로 구분되며, 후자는 7개 지역경제공동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여나 자금(funding, loan 등) 지원임.

■ Institutional Support는, ① Budget Support : NEPAD 사무국의 일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② Sectoral Support : NEPAD 사무국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facilitator/catalyst/negotiator로서의 관장업무, 즉 policy framework 성안, 프로그램 이행계획 작성, 이행지원(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implementation)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며, Programmatic Support는 구체 프로젝트에 대해 원조국이 상기 지역 경제공동체(legal entity는 해당 국가)와 직접 계약당사국이 되어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게 되나 NEPAD 사무국으로부터 framework/modality 마련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monitoring/tracking mechanism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Institutional Support
: Enhance Institutional Coordination Framework among the AU/NEPAD, RGEs, ADB and member States

※ Programmatic Support
: Enhance Capacity for Projects Developments and implementation (AU/NEPAD, RGEs, ADB and member States)

– 동 지역경제공동체는 ECOWAS(Economic Community for West African States),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AMU(Arab Maghreb Union), ECCAS(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임

나. 수원 동향

■ NEPAD framework을 통한 지원 중 Programmatic Support는 NEPAD의 현행 제도와 규정상 관련사항에 대해 NEPAD 사무국에 보고의무가 없는 관계(Programmatic Support는 계약 주체가 원조국가/국제기구와 수원국가)로 사무국도 정확한 수원 동향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대체로

Programmatic Support를 포함한 원조금액 순위는 G8, EU,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순으로 알고 있으나, 가능한대로 데이터를 파악, 알려 주겠음.

■ Institutional Support 관련, 2005년도의 경우 원조국(국제기구 포함)으로부터의 수원금액은 27.3백만 랜드(Rand, 약 445만 미불)로, 주요선진국(국제기구 제외)의 수원 규모는 스웨덴 437만 랜드, 아일랜드 113만 랜드, 벨기에 110만 랜드, 덴마크 107만 랜드, 노르웨이 92만 랜드 등이며, AU 회원국 자체기여금(회원국은 매년 최소 10만미불 이상의 기여금 납부의무)은 26.7백만 랜드 (약445만미불)임.

-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각각 Programmatic Support와 양자원조(특정국가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funding)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

■ 한편, 국제사회의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동향은 부채탕감, 긴급지원 및 선정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업, 보건 · 인구 분야 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주요 원조공여국(북구국가 제외)들이 아프리카대륙의 내재적인 필요에 대한 고려보다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Peace and Security", "Post-Conflict and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ood Governance" 등의 분야에 대한 원조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많은 원조국들이 수원국의 요청보다는 자국의 희망사항 우선 반영을 요청하면서 과도한 safeguard /condition을 부과하는 관계로 기대효과가 저상되는 경우가 상당함. 또한 인프라 분야 원조와 관련, 프로젝트의 성격상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장기간 요청됨에도, 원조공여국의 원조이행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애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북구국가들은 GDP대비 원조금액도 클 뿐 아니라 수원국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원조 행태를 보이고 있음.

3. NEPAD측이 우선지원을 희망하는 분야 및 협력형태

■ NEPAD는 인프라분야와 농업분야(수산업 포함)에 대한 우선 지원을 희망하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지원규모에 따라 달려 있음. 즉,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원규모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하여, 인프라분야는 대체로 지원규모가 크며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음.

■ 한국 측의 지원예정규모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Programmatic Support 75%(인프라분야 40%, 농업분야 35%,), Institutional Support 25%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Programmatic Support의 경우, legal entity의 상대방 당사자를 해당국가로 하여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타당성 검토, framework/modality 성안 등에 대해 NEPAD 사무국이 협조할 수 있음. 우선, 별첨 자료(NEPAD 추진 우선순위 프로젝트)상의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관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 주면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음.

4. NEPAD의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 추진 동향

-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CAADP)'의 주요 목표(thrust)는 ① 지속관리 가능한 농토 확대, ②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품의 시장접근성 향상, ③ 식량공급 확대, 기아감소 및 구급식량 비축, ④ 농업 연구조사 및 기술 향상임.
- NEPAD는 2003.4월 상기 4대 pillar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별첨 CAADP Roadmap 참조)한 바, NEPAD flagship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현재 17개로 6-7년 기간 중 157억미불의 자금소요가 계상되어 있음. 동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중장기(5-10년) 원조/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며, 또한, ① 농업분야에 대한 학문적 · 전문적 연수, ② 전략수립을 위한 정보기술체계, ③ PRSP과정(Poverty Reduction Support Programme) 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WFP, IFAD, FAO 등의 국제기구가 대종을 점하며 개별국가의 원조는 아직 크지 않음. 이는 구체 프로젝트가 타당성(feasibility)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요 원조국들의 평가와 함께, 주요 선진농업국의 자국 농업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보조금 지원제도로 인하여 아프리카 농산물의 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라는 외재적 요인에 기인함.
-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농업개발은 MDGs 달성에 있어 매우 긴요한 분야이며, 최근 AU가 회원국 정부예산의 10%를 농업분야에 지출하기로 결정,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은 상당히 viable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5. 우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분야 및 형태에 관한 남아공대사관 의견

- 상기 NEPAD측의 인프라분야 40%, 농업분야 35%, Institutional Support 25% 비율 참여를 염두에 두되, 우리의 NEPAD에 대한 원조가 시작단계임을 감안, 국제기구(FAO, World Bank, WHO, UNEP, UNESCO, UNCTAD) 및 지역기구(ACBF,

ADB , DBSA 등)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Macharia 담당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농업분야는 SADC, IGAD, ECCAS 지역, 과학 기술 분야는 COMESA, ECA, ECOWAS, SADC 지역, 무역 분야는 ECOWAS지역, 무역분야는 COMESA지역, 인프라분야는 중부아프리카 지역(원유 등 자원부국)과 SADC지역(자원개발 목적의 인프라개발 역점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우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분야 및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는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NEPAD측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NEPAD가 추진 중인 환경분야(생물다양성 분야 포함) 프로젝트 현황

- AU 정상회의(2003.7월)에서 채택된 'Environment Action Plan'에 따라 환경 관련 여러 initiative가 추진되고 있으며, UNEP 아프리카지역사무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주요 관련프로젝트(구체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는 "Climate Change", "Continental Bio-fuel Program - Af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Africa wide-Human and resource capacity Program", "Protected Area", "Access and Benefit Sharing", "Achieving CBD 2010 Biodiversity Target", "Priorit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EPAD Sub-regional Environment Action Plan" 등이 있음.

[자료: 주남아공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87

2006년 UNCTAD 최빈개도국 보고서

UNCTAD 사무국이 7.20 발표한 2006년도 최빈개도국 보고서(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6 : Developing Productive Capacities)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I. 핵심요지

※ 동 보고서는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 노력에 있어 생산능력 배양이 그 중심에 서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① LDC 관련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 개발목표 진전현황 검토, ② LDC의 생산능력 배양과 관련한 동향, ③ 생산능력 개발의 제약요인 분석에 이어 ④ 정책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상기 보고서는 UNCTAD 홈페이지(www.uncta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보고서 Overview 부분은 별첨 송부함.

1. 개 관

■ 2004년 LDC 전체는 평균 실질경제성장율 5.9%를 달성하여 20년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 성과를 거두었고, 2000년대 들어서 원조, 부채탕감, 시장접근 제공 등에 있어 공여국들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LDC의 지속적인 경제적 · 사회적 진전의 관건은 생산기반 구축 여부에 달려있음.

2. LDC의 생산능력 개발과 관련한 동향 및 생산적 고용의 필요성

■ 생산능력 개발과 관련되는 자본축적, 구조적 변화, 노동생산성, 무역,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음.

① 물적 자본축적 및 인적자원 개발 부족, 저축율 부족, 부족한 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FDI나 ODA의 국내민간투자 촉진이나 국

내자본축적 확대 기능 미약 등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2000-2003년 농업, 산업 및 서비스의 GDP 대비 비중이 각각 33%, 26%, 42%를 차지하는 등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③ LDC와 일반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④ 2002-2003년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고 1차산품이 LDC 상품수출의 70%를 차지하며, 낮은 기술수준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집중된 제조업품 수출도 일부 LDC에 집중되어 있음.

⑤ LDC, 일반개도국, 선진국간 매우 큰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인적자원 부족은 LDC에서의 기술능력 배양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거의 대부분의 LDC에서 노동공급 증가율과 자본축적 · 기술진보 비율간의 격차가 커 노동생산성은 낮으며 실업이 만연하고 있고, 농업의 노동인력 흡수능력이 제한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0-2010년간 89백만의 경제인구 증가중 49백만이 비농업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생산적 노동흡수(productive labor absorption)가 필요함.

3. 생산능력 개발 관련 제약요인

■ 물적 인프라 부족, 기업 · 금융 · 지식 분야 취약성, 수요측면의 제약이 LDC 생산능력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① 대부분의 LDC가 운송, 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LDC, 일반개도국, OECD 국가간 인프라 격차가 크며, 계속 확대되고 있고, LDC의 인프라 부족은 기존 시설의 관리부족과 신규투자 부족에 기인함.

② 기업가 정신의 근간이 되는 민간분야 및 제도도 중요하나, 대부분 LDC가 기업, 금융시스템, 지식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③ 경제성장에서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내수요의 부진이 대부분 LDC의 생산능력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4. LDC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정책

■ 따라서, 생산능력 배양이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 노력의 중심이 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LDC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적 · 국제적 정책은 자본축적, 기술진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어야 함.

①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및 원조 확대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민간의 자본 접근 확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 금융, 지식 분야의 제도적 취약성 극복

③ 생산능력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수요측면 고려

II. 관찰 및 평가

■ 보고서는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과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을 제공하여, LDC 정책결정자, 공여국, 관련 국제기구 등에게 LDC 개발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메시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LDC 상품에 대한 특혜 시장접근, ODA 확대, Aid for Trade 등 지원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
- 생산능력 제약요인의 하나로 인프라, 기업 · 금융 · 지식 분야의 취약성 등 공급측면 이외에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급능력 발전과 국내수요간의 선순환 구조 및 cumulative causation을 강조
- 교역재 이외에도 비교역재 분야의 발전을 강조하고 이들 요소의 동적인 연관관계를 강조
- 농업이 국내수요 창출 등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공급 증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비농업 분야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의 필요성을 강조

■ 최빈개도국 보고서는 무역개발보고서, 투자보고서와 함께 UNCTAD의 주요 보고서의 하나로 LDC의 개발전략 및 공여국들의 대LDC 개발원조 및 무역정책,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행 등과 관련하여 주요 reference의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53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시 최빈국 의제 논의, 금년 유엔총회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 행동계획(POA) 이행 중간점검시에도 주요 배경문서의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LDC 개발원조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동 보고서의 주요통계, 사례연구, 분석 및 정책권고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발전과정에서 주요 제약요인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토대로 동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LDC 개발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 모색 등

III. 보고서 주요 내용

1.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 개발목표 진전

가. 최근의 경제동향 : 보고서 I.1장

■ 2004년 LDC 전체의 평균 실질경제성장율은 5.9%로 지난 20년이래 최고의 경제성장 성과를 시현함.
- 석유 비수출국 11개국 포함 15개 LDC가 6%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 달성

■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LDC간 경제성장 격차의 확대 추세도 지속됨.
- 데이터가 있는 46개 LDC중 15개 LDC에서 2004년 1인당 실질 GDP가 정체하거나 감소

■ 성장의 지속가능 여부는 ODA 및 FDI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고, 국내저축 증대, 구조적 변화, 생산능력 배양 및 생산다변화에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음.
- 그러나, ODA 증가의 많은 부분이 부채탕감 및 긴급지원에 해당(2003년 LDC에 대한 총 순ODA의 35%, 2004년 27%)하고, FDI 유입은 주로 자원채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나.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UNLDC III) 개발목표 진전 : 보고서 I.2장

■ 2001년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 목표 달성과 관련, 주목할 만한 사항은 1990년대에 비해 원조, 부채탕감, 시장접근 제공에 있어 공여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임.
- 2004년 LDC에 대한 원조액 249억불로 1999년이래 2배 증대, 일부 LDC에 대한 부채탕감, 무관세 · 무쿼터 시장접근 부여, 원조의 언타이드화(untying of aid) 등

■ 그러나 원조액은 UNLDC III 행동계획(POA : Program of Action)의 GNI 대비 원조 목표에 미달하고, 최근의 원조증가는 부채탕감, 긴급지원의 영향이 크고 아프가니스탄, 콩고(DRC)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프라 및 생산적 분야에 비해 사회 분야에 대한 원조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도 강화되고 있음.
- 전체 LDC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은 증가추세이며, 석유 및 무기류를 제외하면 선진국의 LDC로부터의 총수입액중 DFQF 수입 비중은 1996년 77%에서 2003년 72%로 감소

■ 46개 LDC중 6개국만이 2001-2004년간 POA 목표인 7%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했으며, 39개 LDC중 10개국만이 GDP 대비 투자 25% 목표를 달성했음.
- 18개 LDC가 2001-2004년 연간 1인당 GDP 성장률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함.

■ 인간개발 목표와 관련, 의무교육, 교육에서의 성평등, 물 접근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빈곤, 아동사망율 등에서는 진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 경제적 · 사회적 진전의 관건은 LDC의 생산기반 구축 여부에 달려 있음.

2. 생산능력 개발

가. 생산능력의 정의, 개발방안 및 중요성 : 보고서 II.1장

■ 보고서는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결정하고 국가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자원, 기업 능력 및 생산 연계"를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ies)으로 정의함.

■ 생산능력은 자본축적, 기술진보, 구조변화의 상호연관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개발됨.

■ 생산능력의 개발과 완전한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LDC는 보다 효과적인 빈곤경감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공여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나. 생산능력 개발과 관련한 동향 : 보고서 II.2-3장

1) 자본축적 : 보고서 II.2장

■ 1990년대보다는 개선되었으나, 1999-2003년 LDC 전체의 자본 형성(capital formation)은 GDP의 22%에 불과하고 국내 민간투자는 특히 취약함.

- 보고서상 fast catch-up 시나리오에 필요한 35%에 크게 미달하며, slow catch-up 시나리오에 필요한 28%에도 미달

■ 인적자본 분야에서도 2000년 LDC 성인인구의 평균 취학년수는 3년에 불과하여 일반 개도국의 1960년대 수준이며, 고등교육(취학년수 13년 이상)을 받은 LDC 출신 "high-skill workers" 5명중 1명이 OECD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두뇌유출도 심함.

■ 1999-2003년간 LDC의 국내저축은 GDP 대비 13.6%에 불과하여 자본유입액을 합하더라도 양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임.

- ODA를 제외한 저축(genuine savings without ODA grants)으로 측정한 LDC의 국내 생산기반(productive resource base)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

■ 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수준도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광물자원이 없는 국가일수록 더함.

- 2000-2003년간 일반개도국의 국민 1인당 정부소비지출은 186불이나, LDC 국가는 26불에 불과

■ FDI가 국내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미미하며, ODA도 국내자원조달(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이나 국내자본축적 확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원조의 내용에서도 물적자본 형성이나 생산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1992-1995년 기간 및 2000-2003년 기간에 걸쳐 공여국들의 LDC에 대한 원조중 경제적 인프라나 생산관련 분야에 대한 ODA commitment의 비중이 45%에서 26%로 축소

2) 구조적 변화 : 보고서 II.3장

■ 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으나 LDC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래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었음.
- LDC에서 농업의 비중은 1980-1983년 GDO의 37%에서 2000-2003년 33%로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산업 및 서비스의 비중은 동일기간중 각각 GDP 대비 23% 및 39%에서 26% 및 42%로 증가
- 산업 부가가치 증가의 상당부분은 소수의 LDC에 집중되며 LDC에서 가장 증대한 산업분야는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광업, 석유, 수력발전 분야

■ LDC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다소 증가(modest increase)하였으나, 국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방글라데시가 1990-1993년에서 2000-2003년 기간중 LDC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일 기간중 36개 LDC중 19개 LDC에서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

3) 노동생산성 : 보고서 II.3장

■ 2002-2003년간 평균적으로 LDC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일반개도국의 1/5, 선진국의 1/94 수준이며,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 2000-2003년간 LDC의 노동생산성은 1980-1983년에 비해 단지 12% 증가하였으나, 여타 개도국의 경우 55% 증가

■ 2000-2003년간 농민 1인당 생산성은 1980-1983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비농업 분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9% 감소함.
- 4/5의 LDC에서 비농업분야 노동생산성 감소

4) 무역 (trade integration) : 보고서 II.3장

■ LDC 인구는 세계인구의 10.6%를 차지하나 2000-2003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며, LDC 생산품을 모두 수출하더라도 LDC가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할 비중은 2.4%에 불과함.

■ 1차산품이 2002-2003년간 LDC 수출의 2/3를 차지하며, LDC 수출상품중 제조업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1차산품에서 제조업품으로의 수출품목 전환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중임.
- 1980-1983년 LDC 상품수출중 제조업품이 1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는 약 1/3 차지

■ 제조업품은 의류(garments) 등 낮은 기술수준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 섬유의류협정의 종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수출품 생산은 국내생산 시스템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여타 국내경제와의 연계도 미약함.

■ 제조업품 수출은 소수의 LDC에 집중되어 있음.

■ 1차산품 수출과 관련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upgrading도 매우 부족함.

- LDC의 광물 · 금속 수출중에서 가공 광물 · 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1983년 23%에서 2000-2003년 18%로 축소

■ 주요한 긍정적인 진전은 비가공농산물 수출중 static한 상품에서 어류 · 수산물 등 dynamic한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임.

- UNCTAD는 수요탄력성이 1 이상인 상품을 dynamic한 상품이라고 정의하며, 가장 중요한 dynamic한 상품은 어류 · 수산물

5) 기술발전 : 보고서 II.3장

■ 산업구조적 변화의 부족, 느린 생산성 증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LDC 상품수의 제한 등은 기술습득과 혁신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LDC, 일반개도국, 선진국간에 매우 큰 기술격차가 존재함.

- 2003년 GDP 대비 R&D 지출비중은 LDC가 0.2%, 기타 개도국은 0.3%, OECD 회원국은 2.2% 등

■ 2000-2003년 기간중 LDC 기계장비 수입(import)의 대GDP 비중은 3%로 일반개도국의 4.8%보다 낮으며,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격차가 확대추세에 있음.

■ LDC에서의 인적자원 부족은 기술능력 배양을 어렵게 함.

- 2001년 중등교육(secondary enrollment)에서 기술 · 직업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LDC가 2.6%, 일반개도국은 10.4%, OECD 회원국은 25%
- 20-24세 인구중 고등교육(tertiary enrollment) 비중은 LDC가 6%, 일반개도국이 23%, 고소득 OECD 국가 57%

다. 노동 공급대비 생산적 고용의 부족 : 보고서 II.4장

■ 거의 대부분의 LDC에서 노동공급 증가율과 자본축적 · 기술진보 비율간의 격차가 커 대부분의 노동자가 빈약한 장비, 교육, 인프라에서 raw labour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생산성은 낮으며, 실업이 만연함.

- 2000년 LDC의 총노동인구는 312백만으로 1990년에 비해 71백만이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해 89백만이 증가 예상

■ 지난 25년간 LDC에서 농업이(agricultural land expansion) 노동인구 흡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임.

- land degradation, 1인당 경작지 감소, 소수에게 경작지 집중 등

■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농업 이외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음.

- 2000년 71%의 노동인구가 농업에 종사하

고, 인구의 75%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1980년 17%에서 2000년 25%로 증가

- 2000-2010년간 89백만의 경제인구 증가 중 49백만이 비농업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2010년은 비농업분야 구직인구가 농업분야 구직인구를 앞지르는 첫 번째 decade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예상은 방글라데시의 영향이 크나, 50개 LDC중 24개국에서 비농업분야 경제인구 증가율이 농업분야 경제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전망
- 상기 경향은 빈곤경감을 위해서는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생산적 노동 흡수(productive labor absorption)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라. 생산능력 개발의 제약요인 : 보고서 II.5-7장

1) 물적 인프라 : 보고서 II.5장

- 대부분의 LDC가 운송, 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에너지 격차(energy divide)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기술격차 해소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LDC, 일반개도국, OECD 국가간 인프라 격차가 크며, 계속 확대되고 있음.
  - 1999년 LDC의 1인당 도로율(stock of roads per capita) 및 도로포장율은 1990년에 비해 감소
- LDC의 인프라 부족은 기존 시설의 관리부족과 신규투자 부족에 기인함.
  - 공공투자 감소, ODA에서의 인프라 지원 비중 감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저조 등에 기인
  - 2003년 인프라에 대한 ODA commitment는 1992년에 비해 51% 감소
- LDC와 일반개도국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증대 및 특히 아프리카 LDC에서의 1990-2003년간 인프라 관련 원조 감소 추세의 반전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시 농촌지역 인프라와 district-level links, 대규모 국가적 인프라, 국경간 지역 인프라의 동시 개발이 필요하며, LDC와 기타 개도국간의 전력격차(electricity divide) 해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2) 제도적 취약성 : 보고서 II.6장

-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good governance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의 근간이 되는 민간분야 및 제도도 중요함.
- 대부분 LDC가 기업, 금융시스템, 지식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중소기업 발달 부족, 금융시장은 소규모 비공식 부문과 은행으로 이중적 구조, 지식시스템도 전통적 지식과 근대적 지식의

이중 시스템 구조

- LDC의 GDP 대비 민간분야에 대한 대출 비중은 15%로 다른 저 · 중소득 국가의 60%에 비해 1/4에 불과하며 많은 LDC, 특히 아프리카 LDC에서의 금융자유화 이후 동 비중은 감소하여 금융자유화는 생산적 투자 증대에 실패
- 연구기관 등 지식 창출 기관은 지식 활용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대기업이 자본형성, 혁신,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 하청관계 발전, 클러스터링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sources of financing 발굴, 민간분야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는 성공사례로부터 교훈 도출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loan guarantee scheme, 공공개발은행, value-chain lending, 시장에 기초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 대부분의 LDC에게 있어서 국내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 외국기술수입(라이센싱, FDI, turnkey plants, 자본재수입), 기술인력의 이동성 등 세가지가 가장 중요함.

3) 수요 측면의 제약 : 보고서 II.7장

■ 국내 수요의 확대가 LDC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성장에서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내수요의 부진이 대부분 LDC의 생산능력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

■ 농업이 LDC의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수요는 농업분야의 실적과, 농업과 다른 경제분야와의 연계에 의존함.

- 비교역재 분야에서의 국내수요 진작이 없으면 농업 이외 분야에서의 생산적 고용인력 흡수는 어려움

■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도 중요하며, 특히 국내수요에는 수입요소(import content)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이 중요함.

- LDC의 수출구조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 필요

3. 정책적 의미(policy implications) : 보고서 II.8장

가. 핵심 메시지

■ 생산능력 배양이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을 위한 국내적 · 국제적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나. 패러다임 전환 : 필요성과 성격

1)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빈곤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실업에 기인하므로 빈곤경감을 위해서는 생산적 고용기회 창출이 필요함.

■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 이외 분야에서 고용기회를 찾고 있는데 많은 LDC의 경우 농업 이외 분야에서 노동력의 생산적 분야로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990년대의 개혁정책은 기존 capacity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했으나, capactiy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았음.

■ 정책은 자본축적, 기술발전,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생산능력 발전과 수요확대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2) 패러다임 전환의 성격

■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안정에서 경제성장, 투자, 고용 촉진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

■ 1차, 2차, 3차 산업분야의 상호보완적 상관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해야 하며, 지대추구 행위를 생산적 기업가정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무역 자체보다 개발에 목적을 두고 무역과 개발의 관계를 보아야 하며, 생산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면서 국제무역이 어떻게 자본축적, 기술변화, 구조적 변화, 고용창출 및 빈곤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루어야 함.

다. 정책옵션 및 조치 (상기 "2.라"항에서도 생산능력 개발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LDC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적 · 국제적 정책은 자본축적, 기술진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원조 감소 추세의 반전이 필요하며, 전력 인프라 격차 극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민간의 자본접근 확대, 모든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 · 금융 · 지식 분야의 제도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함.

■ 생산능력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수요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발굴 및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 노력이 필요
- 교역재뿐만 아니라 비교역재에서도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양 분야간 동적 연계가 필요

라. 관리체제(governance) 이슈

■ 실용적 발전 국가(pragmatic development State)의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필요하며,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정부역

할의 최소화가 아니라 정부능력의 배양이 필요함.

■ good governance를 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점진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게 신축성이 필요함.

■ LDC에 대한 원조확대, 부채경감, 무역시장 접근 제공은 LDC의 생산능력 배양 노력과 연계되어야 하며, LDC에 대한 국제지원과 관련한 정책혁신이 필요함.

–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육성, 국내 금융 및 지식 시스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d for trade와 관련한 포괄적 접근

– FDI 등을 통한 공급능력 지원과 병행한 시장접근 확대

– TRIPs 관련 규범을 activate하여 LDC에 대한 기술이전

– 민간분야 개발 및 국내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등

[자료: 주제네바대표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98

APEC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각료회의

I. 핵심요지

■ 베트남 정부가 주최한 "조류 및 인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APEC 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on Avian and Influenza Pandemics)가 5월 4~6(3일간), 다낭에서 개최, 21개 회원국 및 UN, WHO, OIE, WB, ADB, FAO 등이 참석하여, "조류 및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활동계획(Action Plan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s to Avian and Influenza Pandemics)"을 채택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사실을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였고, 2004년 이후 매년 대유행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570만 불 상당의 양자 또는 다자지원을 시행하는 등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조류 및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나갈 것임을 밝힘.

II. 회의 주요 결과

1.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 채택

■ 각료들은 캐나다가 제안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활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 주요 내용

- 본 활동계획은 2005년 정상회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상호 기술 및 재원을 공유하여 지역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함.
- APEC 회원국들은 다음 영역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1)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부문간 협력과 조율 지원
  2)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실행계획 및 접근 방안 마련
  3) 조류인플루엔자의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4) 업무유지, 통상 및 필수서비스 보장을 위한 민간부문과 협력
  5) 지역내 및 국제 공조 노력 강화
- APEC 활동계획 수립시 원칙
  1) 부문간 파트너쉽 구축 및 개발
  2) Communication 강화 및 회원국들간 적시의 투명한 정보 공유강화
  3)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 APEC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WHO, FAO, OIE, 기타 국제기구들의 업무 지원 및 보완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 사례와 대유행 대비 관련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향후에도 활동계획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지를 표명함.

- 우리정부는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사실을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였음.
- 우리정부는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하여 2003 - 200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수의당국과 보건당국이 초기계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하였고, 인수공통전염병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수행하였음.
- 우리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대유행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외국에 도상훈련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해왔으며, 2006년 10월 개최할 도상훈련에 역내 10여개 국가를 참관자격으로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WHO와 연계하여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570만불 상당의 양자 또는 다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그간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조류 및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

Ⅲ. 관찰/평가

■ 금번 회의를 통하여 각료들은 2005년 정상회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조류

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와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음

■ APEC 사무국은 활동계획에서 주요 이슈로 제시하고 있듯이 수의당국과 보건당국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보건부와 농림부의 동참을 독려하였으며, 대다수의 나라가 보건부와 농림부에서 참여함으로써 금번 회의가 향후 AI 관련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AI 관련 농림부와 보건부 공동회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됨

■ 금번 회의에는 장관급 참여 7개국, 차관급 참여 5개국, 주베트남 외교부 공관대표 9개국, WHO 지역사무처장 참여 등 고위급 참여가 많아 회원국이 금번 회의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활동계획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이 있었으며 이 쟁점들을 통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이해관계를 엿볼 수 있었음.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검체(혈액, 호흡기검체, 분리된 바이러스 등)의 국제적인 공유가 필요하다는 항목
  -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바이러스만 공유할 것을 주장함
  - 중국은 현재까지 확진을 위하여 WHO협력 실험실에 검체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2004년 분리된 바이러스만 국제사회와 공유를 추진중에 있음
  - 바이러스는 특히 백신 개발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유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이익만 관철하고 있으며 이는 대유행시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북경회의 이후 뒤늦게 2004년 바이러스만 제공했으며, 검체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은 바이러스만 공유할 것을 주장함
  - 이에 WHO는 검체에는 확진을 위한 혈액, 호흡기 검체 등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미국 ·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가 이에 동의하였고 일부 진단능력이 없는 국가는 확진을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여야 함을 들어 최종적으로 바이러스가 아닌 검체라는 용어에 합의함
- 가금류 통상관련 질병이 없는 지역에 대한 설정(Promote the development of animal epidemic disease free areas) 항목
  - 중국은 이부분에서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주장함
  - 현재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은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가금류 수출이나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OIE 등은 이미 OIE에 이와 관련 규정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제기, 중국측이 이를 수용, 회원국들도 이에 합의함
- 최종적으로 'promote the development of disease free zon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로 합의되었음.

[자료: 주베트남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02

2006 ECOSOC 실질회의(9) - 인도지원분야

1. 핵심 요지

가. 7.18(화) 표제회의 속개되어 위기상황에서의 유엔의 인도적 조정기능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첨 결의 (E/2006/L.13)를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인도지원분야 논의를 종결하였음.

■ 동 결의는 인도적 지원회의 개막에 앞서 일본과 자메이카의 조정하에 문안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실질회의에서는 별도의 토의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됨.

나. 상기 결의 채택에 앞서 '만성적 재원부족에 처한 인도적 위기상황' (Chronically Under-funded Emergencies)이라는 주제로 제2차 공식 패널토의가 개최되었음.

■ 동 패널에 참가한 UN 기구 및 각국 대표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긴급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 관련 UN 및 UN 기구들의 만성적 재정부족 상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만성화된 긴급사태에 대한 공여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2. 관찰 및 평가

가. 금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등지의 내전과 기근 및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사태를 점검하고 UN 및 UN 기구들의 만성적 재원부족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함.

■ 이에 따라 인도적 위기사태시 OCHA 합동어필에 대한 적시대응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정부 지원의 국제적 visibility를 확보하고 UN 차원의 지원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아울러 금번 인도적 지원분야 회의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인도적 위기사태에 대한 긴급지원과 장기적인 개발문제간의 연계 및 조화문제등이 향후 UN 등 여타 인도지원분야 포럼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감안, 관련 회의준비 및 참석에 있어 관련국(局)간 업무협조가 더욱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3. 제2차 공식패널토의 세부 내용

가. A. Cavaco EC 인도지원국장은 EC는 2005년 인도지원 분야에 총 22억유로를 기여하는 등 동 분야에서 가장 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체첸 · 네팔 · 미얀마 등 인도적 위기가 장기화된 '잊혀진 재난' (forgotten crises)에 대한 여타 공여국들의 기여를 촉구함.

나. A. Raghe 아프리카구호위원회 의장은 15년 이상의 내전과 폭력사태 및 기근으로 인한 소말리아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은 만성적인 부족상황임을 설명함.

- 특히 동 의장은 현재 소말리아에 대한 UN 합동어필의 평균 50% 미만만이 재원조달에 성공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말리아의 가장 큰 resource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아닌 해외거주 소말리아인의 본국 송금액이라는 점을 상기함.

다. D. McNamara 긴급구호조정관 특별고문은 콩고(DRC) · 수단 · 우간다 등지에서 발생중인 내전과 기근으로 인한 지속적인 국경내 인구이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화구축과 개발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위해 공여국들이 이 문제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 동 고문은 일례로 2004년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ODA가 10억불에 달했으나 2005년은 2억불로 감소하였고 이중 절반인 1억불은 외채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상기하며 만성적인 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의 감소에 우려를 표명함.

라. EU 대표는 위기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중립적이며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EU는 긴급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시 ear-mark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CERF는 인도적 위기시의 만성적 재원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함.

마. 아울러 인도적 위기상황을 포함한 만성적인 대개도국 지원부족 문제는 (선진공여국의)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기니비사우 대표의 지적에 대해 미국대표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치안문제가 지원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함.

[자료: 주제네바대표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04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 (1)

1.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단장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 현 KOICA 이사)은 6. 21(수) OECD 및 프랑스 외교부를 방문, OECD 개발협력국 Hans E. Lundgren ODA(공적 개발원조) 심사 평가 과장 및 프랑스 외교부 Serge Tomasi 개발정책부국장 등 평가 부서관계자 등과 면담하고, OECD 및 프랑스의 ODA평가시스템에 대해 파악, 조사한 바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아래 보 고함

가. OECD개발협력국 심사평가과장 면담 및 오찬

1) ODA 평가 시스템

■ 박강호 심의관은 우리나라의 ODA 증액과 효율적이고 통합된 심사 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 등 우리의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함.

■ Lundgren 과장은 최근 원조공여국들의 ODA 증대와 함께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평가 관련 조직과 인원이 확대, 증가하는 추세임을 설명하면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도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희망함.

– 특히 동 과장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성공적인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빈곤국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평가시스템 분야 또한 한국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다른 ODA공여국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2) ODA평가체제관련 최근추세(OECD 측 설명)

■ 성과중심 평가제도 정착

■ 다자기구와 NGO의 원조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두

■ 다자원조 공여국과 공동평가 증가

■ 평가에 NGO와 수원국 등 제 3자의 참여 확대

■ 평가결과 환류(feed-back)강화

■ 평가범위 확대(프로젝트 → 프로그램, 원조전략)

■ 평가부서의 독립성 강화

■ 평가결과의 공개

3) ODA 평가시스템구축시 고려사항

■ Lundgren 과장은 그동안 원조 공여국들의 경험을 감안,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제언

- 공정하고 유능한 건설턴트의 활용이 중요하며(덴마크 경우는 다른 외국국적을 가진 독립기관을 이용), 이를 위해 컨설턴트 시장의 활성화가 긴요
- 평가결과는 공개(disclosure)되도록 해야 함.
-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과 재원(staffs and resources)을 확보 해야하며, Asian Development Bank, World Bank 등과의 공동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함

4) 평가결과의 보고시스템

■ 평가관련 경영진과 사업운영부서 및 사업평가부서간 유기적 대화와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함. DAC측은 평가보고서가 ODA 시행기관의 장뿐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 되어야한다고 강조

5) 외교부와 원조이행기관 간의 역할 분담

■ 외교부는 주제별 분야별 종합적, 정책적인 평가 담당

- 정책의 일관성,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여부 등

■ 원조이행기관은 개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

6) 우리나라의 DAC가입관련

■ DAC 가입심사 시 평가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평가에 있어 OECD DAC 평가원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 Lundgren 과장은 한국은 이미 ODA 규모 등 여러 면에서 DAC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DAC 가입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선도적인 ODA 공여국이 되기 위해서 한국이 평가체제를 포함 효율적인 ODA 체제를 구축 하도록 언급함.

나. 프랑스 외교부 ODA평가관계자 면담

1) 프랑스의 ODA 체제

■ 프랑스의 ODA담당기관은 외교부, 재경부, 프랑스 개발청(AFD) 세 기관으로 다른 공여국에 비해 다원적인 체제를 유지.

- AFD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원조자금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원조프로그램도 수행

■ 상기 기관 원조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1998년부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부처간 국제협력 및 개발 위원회(CICID)"를 설치.운용

2) ODA 평가체제

■ 상기 3개 기관이 각각 별도의 평가부서를 두고 평가실시

■ 외교부의 경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 등 우선연대국가 (Priority Zone of Solidarity)에 대한 원조 중 가버넌스, 민주화지원, 치안, 사법 분야 프로그램 및 국가별 평가 실시

■ WFP, EU집행위원회, 등 다자기구와의 공동평가 및 영국 등 다른 EU 국가와의 협력

- 프랑스는 2005년 벨기에에 자국의 ODA 평가체제를 심사해주도록 요청

■ 외교부의 경우 평가관련 정규직원은 6명으로 주로 외부전문가 컨설턴트들을 활용하여 평가실시(ODA예산 중 평가관련 부문은 약 3%)

- 1년 평균 분야별 및 국가별 평가건수는 15개 정도

3) 평가방식

■ 외교부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 재경부와 AFD는 비공개

■ 주로 사후 평가 실시

■ 정량, 정성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나 외교부는 정성적 지표의 비중이 높음.

4) 평가결과 활용

■ 외교부 평가결과는 공개, 그러나 AFD 및 재경부 평가결과는 비공개하며 내부에서만 활용

■ 평가보고서를 관계부처 및 부서, 현지에 배포하며, 평가 결과는 ODA 정책수립단계, 사업발굴 형성단계 등에 반영

■ 외교부 평가결과는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5) 우리나라의 DAC 가입관련

■ Serge Tomasi 개발정책 부국장은 왜 한국이 아직 DAC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문의한 바, 우리측은 우리의 ODA수준제고,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 문제, ODA 관련 조직 정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

■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현 DAC회원국 중 대다수가 한국이 충족하고자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

2. 시사점

■ OECD는 평가원칙, 기준 등 규범 제정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바, 우리도 우선 평가원칙, 기준 등 규범 제정이 필요하며, 동 규범을 KOICA 정관 또는 시행지침에 조속히 명문화해야 할 것임.

■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과 예산, 인원확충이 필요하며, 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인

력을 양성하는 한편, 제한적인 인력사정을 감안, 컨설턴트 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DA 평가결과의 공개는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 향후 우리 외교부의 ODA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국회 및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DAC 가입 전이라도 OECD가 주최하는 ODA평가관련 각종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적극 참여하여 선진 평가제도와 기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선진 원조기관이나 개발관련 다자간 국제기구와의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선진평가기법 공유 및 우리의 ODA 평가 수준 제고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유 · 무상 원조실시 부처 및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 프랑스의 평가시스템은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무상원조관련 외교부가 국별, 분야별 평가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공표하는 체제는 우리로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주스웨덴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08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 보고 (2)

1. 무상원조 심사평가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조사단(단장 박강호 국제 경제국 심의관, 현 KOICA 이사)은 6.22(목) 스웨덴을 방문, 스웨덴 외교부 Torgy Holmgren개발정책국장, Karin Johanson 개발협력관리 및 평가국 부국장 등과 면담하고 스웨덴의 ODA평가시스템을 파악·조사한 바 동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아래 보고함.

가. 스웨덴의 ODA시행체계

■ 대외원조관련 주요정책결정은 외교부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집행은 외교부산하의 대외개발협력청(SIDA)이 담당

- SIDA의 예산은 외교부에 포함되어 외교부 전체예산의 약 50%에 달함
- 대외원조를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

■ 재외공관에 SIDA직원을 파견하여 해당국의 대외지원업무를 감독

■ 특히 SIDA는 대부분의 ODA사업을 NGO를 통해 실시

- NGO 사업의 약 80%를 SIDA가 지원

나. ODA 평가시스템

■ 스웨덴국제개발청(SIDA)의 평가감사국(UTV)에서 프로젝트 및 분야별, 국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 위주 실시

■ 또한 평가의 독립성 확보, 성과중심 관리제도의 도입 및 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대를 위해, 의회 결정에 따라 독립된 평가기관인 스웨덴 개발평가청(Swedish Agency for Development Evaluation)이 최근에 설립되어 국별 평가 및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 평가 업무를 담당

※ 스웨덴 개발평가청

- 개요

: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 분석과 평가 이행 및 결과 확산을 제고하기 위해 2006.1.1 설립

– 목적

: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구체적 목표그룹에게 국제개발협력의 조직, 방향, 규모, 구성 및 효과에 대해 적정, 적시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

– 조직 : 청장 외 직원 11명

– 이사회

: 연간 보고서와 예산의 승인 및 SADEV 활동을 감독하며 독립적인 민간인사 6명 및 청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

다. 평가과정

■ SADEV는 7명의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으로 평가대상, 평가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부, SIDA 등과 공유

■ SIDA 평가감사국은 연간 평가 계획을 작성 이사회에 보고하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검토, 향후 원조 추진 방안을 정부측에 제시

– 정부결정 후 SIDA에서 집행

라. 평가 파트너쉽 및 능력 배양 (capacity building)

■ World Bank 등 다자기구와의 공동평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도 증대

■ 평가 수행 시 수원국 출신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ownership을 제고하고 자체 평가능력 향상에도 기여

마.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적극 공개

– ODA가 꾸준히 증액되어 이에 대한 납세시민의 관심 증대

■ 공개방법

– 관계기관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간행물 발간,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

– 세미나 개최, 연수, 자문, 데이터베이스화

2. 시사점

■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이후 ODA의 증가에 따른 성과여부에 대한 관심확대, 특히 국회 및 시민사회의 ODA성과 분석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치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금년 1월 독립적인 평가기관(SADEV)이 설치됨

■ 동 SADEV는 스웨덴 대외원조의 대외원조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원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운용과 관련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 주스웨덴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10

제2차 한-영 ODA 정책협의회 결과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과 Sam Sharpe 영국 국제개발부(DFID) 정책국 국장대리를 수석대표로 제2차 한-영 ODA정책협의회(Korea-UK ODA Policy Dialogue)가 7.28(금)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주요 결과 아래 통보함.

Ⅰ. 주요결과 및 평가

■ 2003년 한-영 제1차 ODA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이래 영국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금번회의에서 우리측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등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간 ODA 정책 추진관련 공여국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영국측은 OECD-DAC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 정책 개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여타 공여국들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실질적 경험을 축적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정책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영국측은 2002년 제정된 영국국제개발협력법 제정과 금년 3번째로 발간된 영국정부의 개발백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우리정부의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추진, 심사평가부문 역량강화(例, OECD-DAC의 light peer-review 수검 검토)등 일련의 ODA 정책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Ⅱ. 상세 결과

1. 최근 ODA 현황 설명

가. 우리나라의 ODA 현황 및 제도개선 현황

■ 2005년 우리나라 ODA 총액(잠정)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7.44억불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이라크 및 아프간에 대한 양자지원 증가, IDB 및 IDA에 대한 출자 출연 증가에 기인하였음. 이에 따라 ODA/GNI 비율은 일시적으로 0.09%를 기록하였지만 우리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실질적인 개발원조규모의 증대로 연결해 나가기 위하여 2010년까지 GNI의 0.1%, 2015년 0.25%로 국제개발원조예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장관급 위원이 참석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국제개발협력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수립추진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기능 강화 △ODA관련 인원과 조직 확충 △항공권연대기여금 도입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함.

나. 영국의 ODA 현황 및 제도개선 현황

- 2004년 영국의 ODA 규모는 78.83억불을 기록하여 ODA/GNI 비율이 0.36%를 기록하였으며, 동 비율을 2013년까지 0.7%까지 확대할 예정임. ODA 확대와 함께 혁신적 개발재원 확보노력의 일환으로 Int'l Finance Facility(IFF)와 기존의 air traffic levy의 일부를 ODA로 전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임.
- 아울러 개도국에 만연하고 있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대한 제약회사의 R&D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약품이 개발되기전 영국정부가 미리 구매를 약속하는 advance market committment에 대해 설명함.
- 7.13일 발간된 2006년 개발백서의 내용중 △개발원조에 있어 good governance의 중요성,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율적인 국제개발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와 개발원조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함.
- 특히, 2002년 의회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법(Int'l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1997년 이래 지속된 ODA 정책에 대한 개혁이 완성되었으며, 동 법이 영국 ODA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강조함.

2. 최근 국제사회의 ODA관련 주요이슈

- 영국측은 2005년 각국이 약속한 ODA 확대계획에 따르면 2010년 ODA 규모는 13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증가되는 ODA의 효율적인 사용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OECD-DAC이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미래 ODA 확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와 △WB의 수원국 PRS에 대한 지원에 기초한 Results & Resources Framework 확립 추진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함.
- 영국측은 2005.3월 채택된 Paris Declaration 달성을 위한 DFID의 중기행동계획(Mid-term Action Plan)을 설명함. 동 계획은 개별국가, 지역적 및 국제적인 차원, DFID 차원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매트릭스

를 명시하고 수원국에 대한 ODA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원국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field level에서 다양한 UN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함.

■ 우리측은 원조의 조화와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수원국별 수요에 기초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기초한 ODA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UNDP와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동협력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이라 하면서, WB와도 무상원조분야의 공동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3.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 대한 ODA 배분

■ 영국측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ODA 지원이 매우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양극화,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lecturing 보다는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한 lesson learning에 관심이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함.

■ 우리측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깊은 유대관계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규모였지만, 아프리카에 대다수 최빈국이 소재하고 있고 실제적인 개발역량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있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대아프리카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 우리측은 지난 4월 파리에서 개최된 DAC HLM에서 일본 등 각국이 중국의 신흥공여국 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였음을 상기시켰는 바, 이에 대해 영국측은 중국의 등장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ODA는 너무 양자적이므로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자적인 접근 방식(multilateral approach)을 통해 국제사회의 rule을 습득하고 타 공여국과의 정책조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 특히 영국측은 EITI(Extra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에 중국측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도국 천연자원의 건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4. 양국간 협력분야

■ 양측은 양국간 ODA 정책관련 의견교환, 각종 자료의 공유, 직원 상호파견, 공동평가 등 공동협력사업이 양국간 협력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함.

■ UNDP 협력모델에 따른 한-영 양국간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 영국측은 많은 수원국에서 여타 공여국과 협력사업 및 공동사무소를 개설중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등에서 한-영 공

동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 우리측은 현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pilot case로서 베트남에서 양국이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영국측은 금년 영국의 DAC peer review시 중국이 업서버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바, 한국도 피수검국의 양해를 구하고 peer review에 참여하는 것이 DAC 가입 준비 및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 역량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협력의사를 표시함.

5.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우리측은 ODA관련 어떠한 이니셔티브 추진시에도 국내 양극화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 등 국민들의 반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ODA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priority)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함.

■ 영국측은 OD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획득이 가능한 배경으로 △ 영국 국민중 10%가 이민자로 구성된 점 △ ODA에 대한 조기 교육실시 △ ODA 모범 사례를 담고 있는 소책자 배포를 통한 ODA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기적인 survey 실시 등을 설명함.

■ 특히, 영국 학생들이 수상 및 DFID 장관 및 담당자 등 ODA 정책 결정자에 대한 편지 송부를 통하여 ODA 정책 결정과정에 미약하나마 참여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설명함.

[자료: 외교통상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14

영국정부 개발원조 백서 발간

1.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7.13 개발원조 백서(White Paper on Inter - national Development)를 발간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별첨 보고함.

   ※ www.dfid.gov.uk/wp2006/default.asp 에서 백원본은검색 가능

   ■ 백서의 전체 제목은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overnance work for the poor"로서, 금번 백서는 지난 2000년 백서 발간 이후 6년 만에 새로이 발간되어 영국 정부의 향후 원조정책의 방향과 비전 제시

2. 백서는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과제를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됨.

   ■ chapter 1에서는 2005년 글렌이글스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공약과 현재까지의 진전 상황에 대해 언급

   ■ 나머지 chapter는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해야 할 4대 과제 (① 빈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가건설(善政), ② 평화와 안전의 증진 및 경제성장 촉진, ③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④ 효율적인 국제개발 시스템 구축)별로 1-2개의 chapter 할당

3. 금번 백서의 주요 특징은 ① 일반 빈곤국민들에 대한 효과적 원조 제공을 위해 개도국 정부의 부패, 善政 등의 문제가 중점 부각되었다는 것과 ② 기후변화문제를 거론하여 환경과 빈곤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 원조효과에 대한 관계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며, 또한 ③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 확대 필요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UN, EU 등의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 등으로 평가됨.

〈 영국 국제개발원조 백서 주요내용 〉

1. 2005년도 공약의 이행 (Chapter 1)

가. 영국정부는 2005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조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타 관련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임.

나. 영국 정부는 개발원조 예산을 2013년까지 GNI의 0.7%로 확대하고, 원조 대상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그리고 분쟁에 취약한 국가들에 집중할 것임.

다. 신약개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을 포함하여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0년까지 두배로 증가시킬 것임.

2. 빈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가건설 (善政) (Chapter 2&3)

가. 효율적인 국가 및 善政 구축

1) 善政은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정당, 의회, 사법기관, 언론, 시민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량(capability,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응성(responsiveness, 국민들의 희망과 수요에 대한 고려), 책임성(accountability, 이행된 성과에 대한 책임) 등을 요건으로 함.

※ 백서에서는 governance의 개선을 이룬 성공사례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언급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South Korea, have changed the lives of millions of their citizens.")

2) 영국정부는 향후 원조 여부 결정시 원조대상국가의 빈곤 감소를 위한 신념, 인권신장과 국제 의무에 대한 신념, 공공금융관리 개선 · 선정과 청렴 · 부패 추방에 대한 신념을 고려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 평가에는 '통치체제의 질' 평가('quality of governance' assessment) 기법을 이용할 것임.

3) 원조대상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원조형태나 방법을 달리할 것임.

① 통치체제가 양호하다면 이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원조대상국가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 예산지원(direct budget support) 고려

② 통치체제가 썩 양호하지 않다면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된 원조를 제공하거나 사업평가와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

③ 대상국가 정부의 신념이 전혀 없는 경우

정부와는 전적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시행

4) 부패는 나쁜 통치의 근원인 동시에 그 징후이며, 영국 정부는 회계감사의 투명성 점검, 부패의 사법적 해결 지원, 부패척결노력 평가결과의 원조정책 반영 등을 통해 개도국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나. 선정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1) 통치의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서, 개도국의 통치능력이 미약하여 국내 입법이나 규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면 국제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개도국 국내 입법의 허점을 악용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분쟁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영국정부는 UN 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영국정부는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간 Action Plan을 발간할 것이며, 2006년말까지 City of London, 런던 경시청 소속의 경찰로 구성되는 해외부패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임.

2) 개도국의 천연자원이 잘못 관리되어 저주(curse)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 영국정부는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산유국 정부와 석유기업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2년 제안하여 출범)가 good management의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도록 UN 총회 결의를 주도할 것이며, EITI의 상설사무국 구성도 추진할 것임.

3. 평화와 안전의 증진 및 경제성장 촉진 (Chapter 4&5&6)

가. 평화와 안전의 증진

1)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의 확보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정부기관(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책임질 수 있는 경찰, 군, 국경통제, 사법체계 등) 건설 지원 및 국제사회의 분쟁 방지 능력 확보 등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2) 정부기관 건설 과제를 위해 영국 정부는 개도국의 안보 관련 기구 개혁, 무기확산 방지, 무장요원 해체, 사회적 소외 및 과격화 예방 등을 지원하는 데 향후 원조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임.

3) 국제사회가 분쟁방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추구할 것임.

■ '보호할 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2005년 UN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대한 합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

■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분쟁에 취약한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분쟁당사자간 중재노력 강화

■ UN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에 대한 외교적 · 재정적 지원 강화

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1) 교역과 개방은 경제성장의 관건이며, 개도국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빈곤국 경제성장의 가속화(grow faster), 빈곤층에 대한 경제성장의 혜택 부여,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반을 두는 성장, 개도국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국제무역체제를 위한 협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이민 관리 등 다섯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음.

2) 영국 정부는 성장을 원조의 '탈출전략' ('exit strategy')으로 간주하며,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개도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지원,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과학기술분야 지원확대, 민간부문 발전과 고용증진 방안 강구 등의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3)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서 ' 성장은 지금, 분배는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함.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과 소액금융지원(microfinance) 을 강화할 것임.

4) 영국 정부는 국제무역이 성장에 절대적이라는 인식 하에 DDA 협상이 개도국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EU의 공동농업정책이 빈곤국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1) 영국 정부는 교육, 의료, 상하수도 설비,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등 네 가지를 MDGs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간주하며,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전체 영국정부의 대개도국 직접 지원의 절반에 이르도록 할 예정임.

2) 교육은 권리임과 동시에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구인바, 향후 10년간 85억 파운드의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여학생 증가, 직업교육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5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을 위한 국제재정지원' (IFFIm)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HIV 예방/치료를 이끄는 국제적 노력(UNAIDS)도 지원할 예정임.

3) 전세계 11억명이 안전하지 않은 물을 음료하고 있고, 이로 인해 5세 이하 아동의 사망이

매일 5,000명에 이르고 있어 영국 정부는 개도국의 안전한 상하수 설비를 확보하도록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며(2010/11년까지 2억파운드),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NGO 등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개선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임.

4.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Chapter 7)

가. 기온상승, 강우량 감소 등 기후변화 현상은 개도국의 식량, 건강,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며, 영국은 개도국과의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G8+5 회의 등)을 지속하고, 청정에너지 개발 노력을 지원할 예정임.

나. 개도국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adaptation,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여나간다는 의미)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와 대체작물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나, 기후변화가 빈곤과 경제성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수적임.

다. 영국 정부는 UN, EU, 다자 개발은행들과 함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 제고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적응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해 발생 이전에 이에 대비하는 노력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5. 효율적인 국제개발 시스템 구축 (Chapter 8)

※ 전 세계 개도국 원조비율 : 양자(74%), 다자(26%)
- 양자 : 영국 7%, 영국 이외 OECD DAC(63%), 여타국가(4%)
- 다자 : EC (10%), World Bank(9%), UN (4%), 기타 (3%)

가. 21세기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도록 국제기구가 효율적으로 변해야 하며, 특히 국제개발원조 시스템은 아래 다섯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 높은 수준의 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며,
2)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스스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3) 각국이 공약한 사항들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4) 인권과 여타 국제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며,
5) 빈곤감소를 위해 합의된 목표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함.

나. UN은 분쟁예방 · 평화중재 ·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인권분야에서처럼 국제적인 협정과 기준을 개발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UN의 개혁이 필요함.

■ UN 산하기관과 원조 프로그램의 합리화도 필요한데, 각 개도국에 대해 단일한 조직과 예산으로 단일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통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다. World Bank와 IMF가 개발원조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형태의 원조 제공, 중소득국들에 대한 자금지원 편의 제공(중소득국들의 개발자금 확보창구로 World Bank의 매력 감소 추이),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집중 등의 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하며, 영국정부는 World Bank와 IMF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들 기구내 개도국들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임.

라. 영국정부는 EU의 원조시스템이 국제적인 원조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국제개발기구에서의 EU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임.

마. 영국정부는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합의된 Paris Declaration (2005.3월)의 이행을 위해 여타국과 협력할 것이며, 원조 공약에 대한 이행 감독을 위해 OECD DAC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20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회의(CGI) 개최

1. 회의개요

■ 표제회의가 인도네시아 정부주관(WB 인니 사무소 협조)으로 "경제 · 사회개발, 재난대응 및 2006년 원조국 유무상 원조"를 주요 토의의제로 6.14(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원조 공여국 정부대표(21개국 참가), World Bank, UNDP, IFC, IMF, ADB, 이슬람 개발은행(IDB) 등 9개 국제기구, NGO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2. 핵심요지

■ Boediono 경제조정장관은 개막사를 통해 금년도 5.7-5.9%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개혁 프로그램(투자, 기간산업 정책 패키지 발표 및 금융정책 패키지 준비중)과 주재국 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5.27 발생한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관련 복구에 긴급 지원을 한 CGI 멤버들에 대한 사의를 표함.

■ 금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EU, 한국 등 주요 국가대표들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최근 인니 정부에 의한 경제 개혁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여건 개선 및 개혁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금번 CGI 회의시, CGI 멤버들은 39억불의 개발차관 및 2억불 규모 무상원조를 발표

- 별도로 15억불 규모의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진피해 지원 의사를 밝힘.
- 우리 대표는 금년도 EDCF 1억불 및 무상원조 14.19백만불(족자 지진피해 지원 2백만불 포함) 지원 의사를 발표함.

3. 주요 내용

가. 의제 1 : 경제 (투자, 성장 및 거시경제) 및 사회개발

■ Mulyani 재무부 장관은 금년도 5.7~5.9%의 경제성장(당초 정부목표 6.2%의 하향조정) 및 내년도 6~6.5%의 성장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운영 및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신투자법 및 관세, 세제 등 세법개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니 정부의 지원정책 소개 및 이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CGI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원조 및 투자증대를 요청함.

– 동 재무장관은 대인니 기간산업 투자관련 "리스크 분산 재정지원 장관령(financial risk resharging decree)"을 최근 서명하였다고 소개함

※ 금번 회의시 인니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

• GDP 성장률 : 5.7-5.9%
• 재정적자율 : GDP 대비 1.3-1.5%
• 루피화 환율 : 미달러화대비 9300Rp
• 이자율 : 12%
• 인플레율 : 8%

■ Abdullah 중앙은행장은 루피화 가치 안정 및 15%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고이자율 정책(현재 12.5%) 및 긴축적인 통화정책(Tight Monetary Policy)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금융부문의 개혁을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금년도 연평균 5.7~5.9%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함.

– 2006년도 1/4분기 성장률 4.6%였으며, IMF측은 금년도 성장률을 5.2% 대로 전망함.

■ Boediono 경제조정장관은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이 인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사회약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직접 빈곤퇴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의 개선을 약속함.

– 05.10.1 단행된 국내유가인상(평균 126% 인상) 관련,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함.

■ Widodo 정치 · 법률 · 안보조정장관은 최근 인니 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고 테러리즘 등 국가안보, 불법도벌, 밀수, 불법조업 근절 문제 등이 인니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소개함.

■ 이에 대해 CGI 멤버들은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 예측과는 다르게 경제성장 둔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표시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선정 강화(good governance), 경제개혁조치의 실질적인 이행 및 관련 개혁 법안의 조속 의회 통과 등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요청함.

– 한국정부로서도 주재국이 추진중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과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주재국에 개발과정에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함. 한편,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이에 대해 Boediono 경제조정장관도 현재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단체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인 바, 동 협상 추이를 보아 가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함.

나. 의제 2 : 재난대응(족자카르타 지진, 조류독감 및 아체 쓰나미)

■ 인니 정부는 금번 족자카르타 지진 및 2004년 남아시아 지진피해에 대한 CGI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관대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금번 족자카르타 및 중부 자바지역의 "지진피해 및 손실 산정 보고서"(지진피해규모를 31억불로 잠정 추산, 별첨1 참조)를 제출함.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재건 · 복구 Action Plan을 만들 예정이나, 족자카르타의 경우 아체와는 다르게 지방 정부가 건재하고 피해 분야도 주로 주택 파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 신속한 재건 · 복구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함.

- 주재국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7.1부터 피해 지역에서 주택 수리 및 재건 파일럿트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이라 하며, 공여국들에 대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 World Bank는 금융지원을 위한 각국의 지원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금액이 부문별로 mis-matching되는 비효율적 배분을 막기 위해 재원배분의 효율적인 mechanism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Aceh지역의 peace process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도 필요함을 언급함.

■ 주요 국가들의 족자르타 및 중부자바 지진 피해 관련 지원 규모 발표

- 일본(1천만불), 미국(7백만불), 영국(500만 파운드), 호주(750만 호주불), EU(3백만불) 등
- 우리 대표단도 19명의 긴급구호팀 파견 및 2백만불의 긴급구호 및 재건 · 복구 자금 지원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함.

다. 의제 3 : 2006년도 재정소요 및 2007년도 연간 작업계획

■ 인니 정부는 2006년도 재정소요 및 중기개발계획(2004~2009년)에 따라 2007년도 주요 추진과제(9개)가 담긴 연간 작업계획을 발표하고, 빈곤퇴치, MDGs 달성, 고용확대 및 수출 ·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소요 부문은 국채발행 및 외화차입을 통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CGI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유무상원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2006년도 재정 소요 규모
  : 총 167~170억불
  • 예산적자 : 43~46억불
  • 외채상환 등 기타 소요 : 123억불
- 2006년도 재정 소요분 조달 계획
  : 167~170억불
  • 국내조달(국채발행등) : 120~123억불
  • 해외조달 : CGI 39~42억불,
  non-CGI 4~5억불

■ 이에 대해 CGI 회원국들은 유무상포함 총 54억불을 중기 경제개발 및 재건복구에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39억불은 2006년도 개발지원자금으로 서약하고, 족자카르타 지진 피해 복구 자금지원으로 15억불을 발표함.

- 39억불의 개발지원 자금을 37억불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loan이고 나머지 2억불은 정부개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무상(grants)으로 지원할 예정
- 주요 국가의 지원액 규모 : World Bank 9-11억불, ADB 9억불, 일본 8.4억불, 독일 2.5억불, 영국 5천만파운드, 호주 3.2억호주불, 미국 1.7억불(추가로 55만불 지원예정) 등
- 우리 대표단은 인니를 금년부터 중점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고 소개하고 2006~2009년까지 우리의 대인니 유무상지원 금액은 4.3억불(4억불 EDCF 차관, 3천만불 무상원조)규모이며, 2006년도에는 1억불의 유상 및 1,419백만불의 무상지원(2백만불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복구내용 포함)을 발표함.

4.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진 피해 재건·복구 지원 방법

■ 주재국 Boediono 경제조정장관 및 Sri Mulyani 재무장관에 따르면 주재국측은 금번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역 지진 피해시 재건·복구를 위한 공여국들의 지원 절차에 대해 아래 방법을 제시함.

① 아체 경우처럼, World Bank 주관으로 다국가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을 설치하고 각국이 동 기금에 지원금을 납부하는 방안
- 단, 이 경우 별도의 신탁기금 설치 대신, 기존 아체 신탁기금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중
- 동 기금에 공여국이 재건·복구비용을 납부할 경우, World Bank 가 인니 정부 및 기금 납부 공여국들과 협의, 재건·복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동 이행하는 방식(Pool 방식)

② 각 공여국이 재건·복구비용을 인니 정부 예산에 제공하는 방법(인니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

– 이 경우, 인니 정부가 자체 재건 · 복구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공여국에 대해서 사용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

– 재무장관에 따르면 무상지원의 경우, 각 공여국이 직접 족자카르타 지방 정부에 대해 기금을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입장

③ 각 공여국이 재건 · 복구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직접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식

– 이 경우, 지방 정부와 협의, 적절한 재건 · 복구 사업을 발굴해서 공여국이 직접 계약, 사업 추진 방식

■ 상기 방식 관련 우리 정부는 기존 아체 관례에 따라 3번째 방식(직접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부 검토 결과를 회신 바람.

– 단, 지원대상 사업 분야는 주재국 정부의 재건 · 복구 Action Plan 작성 및 여타국의 지원 동향 등을 보아 가면서 추후 건의 예정

※ 족자카르타 주지사(술탄)는 한국 정부가 건축자재(벽돌, 기와, 나무, 시멘트 등)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자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25

2006년 베트남 중간연도 원조공여국회의 개최 결과 보고

Ⅰ. 핵심 요지

1. 회의 개요

■ 표제회의(Informal Mid-Y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ma)가 2006.6.9~10간 22개 주요 원조공여국, World Bank 및 ADB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 4개 국제 NGO 대표 및 주재국 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국 냐짱(Nha Trang)시에서 개최됨.

- 베측은 Pham Gia Khiem 부총리, Vo Hong Phuc 기획투자부 장관 및 국회외교위 부위원장, 중앙은행 부총재 및 무역부 · 보건부 등 주재국 각부처 차관 등이 다수 참석(중간연도회의시 부총리의 참석은 금번이 최초)
- 우리측은 베트남대사관 유연철 참사관, KOICA베트남 사무소 김승범 사무소장 등 참석

2. 주요 논의내용

■ 금번 회의는 ① 베트남의 2006년 상반기 경제 실적 점검 및 2006-201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안, ② 원조의 조화 및 효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06. 1-5월간 전년대비 수출 24%, 산업생산 15.9%, 외국인투자 19.7% 증가
- 2010년까지 1인당 GDP 1,000불 이상, 수출 매년 22% 증가, 숙련노동인구 비율 40%, 고체폐기물의 90% 처리 등 목표 수립
- 경제 · 사회 · 환경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한 지속 가능한 발전 강조

■ 공여국들은 금번 회의시 주재국의 WTO 가입 준비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 법률적 개혁 등의 제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사회 ·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커다란 장애요소가 부정부패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governance system 의 구축 등 행정 개혁과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함.

- 주재국 공공구매법(4.1) 및 반부정부패법(6.1) 발효, 투자법 · 기업법 및 환경보호법 발효 예정(7.1)

■ 원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 주재국 정부는 ODA 관련 법률 개정 및 원조 전략(ODA Framework)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최근 교통부 고위 간부의 PMU(Project Management Unit) 18 프로젝트의 자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마련중인 PMU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임을 설명함.

- 2010년까지 ODA 지원규모는 11억불 정도로 전망
- 효율적인 ODA 활용을 위해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
  - ODA 활용관련 농촌개발 및 빈곤감축분야(21%)와 교통 · 통신 및 도시개발분야(33%)는 증가 예상이나 에너지 · 산업분야(15%)는 여타 자원의 동원 가능성을 감안, 다소 감소 예상

■ 공여국은 모든 레벨에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재국 정부의 ODA 프로젝트 관리체제의 합리화 노력을 평가함.

■ 우리 대표단은 최근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베트남을 중점 지원 예정임을 발표함.

- 또한, 베트남 사회 · 경제개발계획의 세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약 70%)
- 반부패관련 행정개혁의 중요성과 조류독감관련 우리 농림부의 전문가 초청사업 등 지원 계획 설명

■ 차기 원조공여국 연례회의는 2006년 12월 중 하노이에서 개최키로함.

3.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중간연도 원조공여국회의로서는 최초로 주재국 부총리가 참석하고 기획투자부장관을 비롯 다수의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바, 이는 금년도가 도이모이 20주년 및 WTO 가입,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해로서 금번회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금번회의시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행정개혁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우리로서도 반부정부패관련 경험 전수 등 관련 협력 사업의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시의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베트남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분야인 전자정부(e-government)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동건 관련 당지 ADB 소장은 ADB Trust Fund 내 한국측 기여 IT분야 기금을 활용한 e-government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언급

Ⅱ. 의제별 논의 요지

1. Vo Hong Phuc 기획투자부 장관 개막 연설 요지

■ 지난 4월 제10차 전당대회시 채택된 2006~2010 경제사회개발계획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조만간 승인될 예정임을 설명함.

■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원조공여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2. 2006-1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가. 베측 설명요지

■ 가뭄, 조류독감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양적 및 질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투자의 확대 계획을 설명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탈피 및 국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2006-10까지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사회, 경제, 환경부문에서의 주요과제 및 목표수치를 제시함.

- 2010년까지 1인당 GDP 1,000불 이상 등

나. 주요 토론 내용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정의의 실현, 질적인 성장 및 책임감이 필요함을 언급함.

-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한 질적인 성장, 부패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함을 제기

■ 투자 허가 취득 등 외국인투자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함.

3. 사회 경제 개발 (경제 성장, HIV, 지속가능한 개발)

가. 베측 설명 요지

■ HIV 분야에 대한 강력한 정책 및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HIV에 대한 국가전략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능력배양을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HIV에 대한 공여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2010년까지 ODA지원규모가 11억불 될 것으로 전망하며, 효율적인 ODA 동원 및 활용(mobilization and utilization)을 위한 분야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소개함.

- 농촌 및 빈곤감축 분야와 교통 · 통신 및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지원 증대와 에너지 · 산업화 부문에 지원은 감소

나. 주요 토의 내용

■ 공여국들은 금번 SEDP가 많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ODA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ODA Management가 필요함을 강조함.

■ 아울러, 소수민족, 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Bottom up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계획이 반영되어 국가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또한 베트남 환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높게 평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세부계획(Action Plan) 실행 노력을 요청

■ 상업적인 성문제 해결 및 예방교육을 통해 HIV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 재경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함.

4. 제도 정비(부패 방지, WTO, 행정개혁 등)

가. 베측 설명 요지

■ 반부패법이 작년 11월 국회에 의해 승인되고 금년 6.1부터 발효된 바, 베트남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 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함.

■ WTO가입 관련, 미국 등 주요 대상국과 원활하게 협상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향후 WTO가입에 따른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개혁, 법적 제도 정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함.

■ 체계적인 공공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 제도 개선, 금융제도 개선, 공무원 행정능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을 소개하고, 행정서비스 능력 강화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차기 5년간의 계획을 설명함.

나. 주요 토의 내용

■ 반부패관련 투명성, 문서공개 등에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투자가 증가될수록 더욱 부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계속 필요함을 언급함.

■ 반부패를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 정부의 책임감, 공무원들의 급여에 대한 개선(pay reform) 및 언론 보장, 국회의 감시 기능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덴마크, 스웨덴 등은 부패방지를 위해 법률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많은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 WTO 협상에 대한 빠른 추진상황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베트남의 WTO 가입은 향

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나, 이에 대한 여러 도전(challenge)을 우려함.

5. 분야별 추진 전략 (재정, 교육, 농업, 교통, 기타)

가. 베측 설명 요지

■ 재정 분야

: 투자 활성화, 경제 안정 등을 위해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재정 및 예산정책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지방정부 예산을 향후 1.9배 확대할 예정이며,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현대적 재정 관리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교육 분야

: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으로서, 인력자원의 질적 성장,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 확대,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농업 및 지역개발

: 조류독감, 가뭄 등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농업부문 성장률 3.6%를 시현하였으며, 고급기술 도입 및 시골지역 경제 발전을 통해 농업생산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을 설명함.

■ 운 송

: ODA 지원, 타 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해 운송분야는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향후 도로, 항공,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을 더욱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함.

나. 주요 토의 내용

■ 공여국은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여러 분야에서 분야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논의된 상기 분야는 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HIV환자,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요청함

- HIV 환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필요
- 소수민족에 대한 모국어 문제, 교육 커리큐럼 부재 등을 지적

■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농촌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도시지역의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함.

-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질적인 서비스 향상의 필요함을 지적

6. 원조의 조화 및 효율성

가. 베측 설명 요지

■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ODA법률 17조

를 개정하고, 또한 기존에 수립된 원조전략(ODA Framework)을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마련중에 있는 PMU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임을 설명함.

■ 작년 3월 파리 고위급회담 후속조치로 수립된 HCS (Hanoi Core Statment)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원조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Baseline Survey, ODA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나. 주요 토의 내용

■ 공여국은 베측이 DAD(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 Independent Monitoring 등을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속히 수립한 것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을 요청함.

■ HCS의 Indicator는 Bottom up 과 Top down 방식을 통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정부에서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함.

■ 영국등의 대표단은 공여국간의 원조조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Cost Horns(비용 지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성을 제기함.

■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특히 반부패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요청함.

[자료: 주베트남대사관]

국제협력 동향 2006호 3번 째 1970.5.19 8:33 AM 페이지 131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년 제3호

발 행	2006년 10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마스터-원 TEL.(02)2272-5002(代)